

경제정책 하면

# 나라경제

2012  
nara.kdi.re.kr

# 9

##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나

이슈

자연 더하기, 삶 올리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인터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집중토론

부동산시장 정상화, 근본적인 해법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미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2012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 주최 | 기획재정부 · KDI | 후원 | 세계미래포럼 · 매일경제

응모기간 : 2012. 8. 1 ~ 9. 17

## | 공모 주제 |

- ▶ 100세 시대 대책, 양극화 해소 대책, 다문화 가정 증가의 영향과 대책, 중장기 에너지 대책, 인터넷 통신망 붕괴와 대책, 정보기술 접근성 격차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中 택1

## | 참가 대상 |

- ▶ 2012년 9월 현재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 및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 고등학생 부문은 한 학교당 2편 이내로 제한 접수(학교장추천서 첨부)
  - \* 대학생 · 고등학생 부문 모두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참여자 모두 자격기준 충족 시)

## | 응모 형태 |

- ▶ 논문(대학생), 논술(고등학생)

## | 일 정 |

- ▶ 응모 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7일
- ▶ 응모 방법 : 온라인 응모([www.miraekorea.org](http://www.miraekorea.org))
- ▶ 결과 발표 : 2012년 11월중

| 시상 내역 | 입상작 총 20편, 상금 총 2,400만원

	대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대 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600만원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부상
최우수상	1편	KDI 원장상, 상금 400만원	1편	KDI 원장상, 부상
우 수 상	3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300만원	3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장 려 상	5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100만원	5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 고등학생 부문은 상금 없이 상장과 부상만 수여

## | 문 의 |

- ▶ KDI 경제정보센터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TEL : 02-958-4635 / E-mail : mirae@kdi.re.kr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miraekorea.org](http://www.miraekorea.org)) 참조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디자인회사 IDEO에 입사한 **성정기** 디자이너

# 2001년 가을, 디자인으로 **낯선 이의 마음을 움직이다**

2004년 미국에 왔으니 벌써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루나디자인(LUNAR DESIGN)에서 시니어 콘셉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겨우 미국에서의 디자이너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힘들고 고단할 때면 나는 항상 2001년 가을을 회상한다. 그 순간은 내가 디자인한 '무엇'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디자이너로서 인생 최초의,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세계 산업디자이너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당시 디자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1988년 올림픽을 다시 맞이한 것처럼 들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흥분된 마음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당시 늦깎이 대학생 신분으로 운 좋게 같은 해에 치러진 LG전자 국제디자인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수상자 자격으로 세계산업디자인총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작을 발표하는 영광을 누렸다. 세계적 디자이너들과 관계자들 앞에서의 발표, 하지만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는 어렵게 준비해간 영어 원고를 그저 읽기 바빴고, 긴장감 속에 발표를 서둘러 마치려 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내 발표는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어느 외국 할아버지의 영어 질문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듯했다. 다행히 통역을 해줄 분을 찾았고, 간단한 영어로 겨우 답을 하고 나서야 발표는 끝이 났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찬찬히 내 작업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명함 한 장을 쥐어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 한 장의 명함은 마치 수호신처럼 내 지갑 속에 자리 잡고 있고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는 소중한 존재가 됐다. 사실 유학은 물론 어학연수조차 하기 어려웠던 나로서는 외국생활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기에 무슨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저 내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준 첫 번째 외국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

지만 왠지 좋은 기운을 주는 것만 같았기에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디자인 잡지 특집기사에서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을 보게 됐다. 지갑속 명함을 꺼내 확인하니 내 지갑 속에서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다. 비로소 그 인자했던 할아버지가 세계 최대 디자인회사 중 하나인 아이디오(IDEO)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때 받은 명함과 "당신께서 하신 사소한 행동이 어느 한 젊은이에겐 희망이 돼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했다"라는 짧은 글의 편지와 함께 그분에게 보냈다.

다행히도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IDEO로부터 "지금까지 받아본 포트폴리오 중 최고였다"라는 과분한 찬사와 함께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04년 IDEO 보스턴에 인턴생활도 없이 바로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기회를 얻었다. 회사에서 영어 개인교습과 아파트도 제공해줬는데 입사 후 알고 보니 나에 대한 대우는 회사 설립 이래 처음 있는 파격적 혜택이라고 했다.

나를 바라보던 낯선 이의 인자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마음속에서 매순간 함께하며 나의 길을 가게 하는 그때 그 순간을 어찌 잊겠는가. **성정기**



**성정기** 미국 루나디자인 시니어 콘셉트 디자이너  
2003년 21세기 우수 인재상 디자인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포스트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선정됐다. 2012년 독일 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비롯해 세계 디자인 공모전에서 20여회 이상 수상했다.

# SPECIAL THEME

특집



##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나

- 10 전환기의 세계경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장
- 12 유럽 강타한 은행·재정·경제위기 삼중고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
- 14 빛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그리스  
양태삼 연합뉴스 부다페스트 특파원
- 15 경제위기 여파 식탁에도...에피타이저·후식은 생략!  
이성훈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 16 '갑작스러운 재정지출 감소' 우려 증폭...해답은 부채 감축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18 낙관론vs비관론 팽팽해...중서부 대개발로 불황 극복 나설 것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
- 20 세계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반될 신흥국의 지속성장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 22 내수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경제구조 튼튼히  
이역원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 인터뷰

44 “게임중독 아이 치유했을 때 학부모와 같이 울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 정책해설 Plus \_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

- 60 2020년까지 자전거길 2,117km 설치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 62 '단절 없는 자전거길', 지자체 간 협조가 필수  
최순규 성남시청 자전거문화팀장
- 63 '점프' 없는 자전거 이용 시급해  
이강주 자전거길 이용자
- 64 위급상황 대비해 자전거에 비상연락 기록물 부착해야  
김수기 바이크매거진 기자
- 65 필요한 시설, 이용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자전거연구실장

### 경제정책해설

- 68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금 공제 확대  
조규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70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전략지도 만들다  
강중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72 농수산물 품질관리 '통합'...우수관리 인증기간 2년  
최명철 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장
- 74 2015년까지 해외정부조달시장에서 수출 60억달러 달성  
신동준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장
- 76 오픈마켓 사업자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진다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44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 집중토론

#### 28 부동산시장 정상화, 근본적인 해법은?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 03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2001년 가을, 디자인으로 낯선 이의 마음을 움직이다  
성정기 미국 루나디자인 디자이너

### 외신보도 분석

#### 78 수출급감 · 제조업 경기악화, 한국경제 '빨간불'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79 미국경제, 재정절벽 우려로 성장둔화 압박 가중

이선하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나라경제 인사이트

#### 54 경제 기초체력 떨어진 선진국, 국제시장에선 훨훨 나는 이유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 56 경제민주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세계는 지금

#### 80 특허 등 무형자산 거래 시 가치평가 어떻게?

최재봉 주OECD대표부 참사관

#### 83 특허전쟁, '게임의 룰'부터 챙겨야 이긴다

김용선 주제네바대표부 WIPO 총괄 참사관

#### 86 FTA 관세 혜택 극대화하려면 BOI 검토부터!

성태곤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 89 침체에 빠진 호주 경제, 생산성 증대가 화두

최규철 KOTRA 호주 시드니 무역관 차장

### 이슈

#### 자연 더하기, 삶 올리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34 '자연의 회복력' 높이기 위해 세계 환경인, 제주에 모여  
유선일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기자

35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총회 사상 최초 '세계리더스대화'  
김나경 2012 WCC 조직위원회 프로그램개발팀 전문위원

36 생명의 근원을 여행하라!  
고제량 생태문화여행 기획자, 제주생태관광 대표

38 '31일간의 제주여행', 막은 올랐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39 1만8천여 신들이 살았던 땅, 제주가 들려주는 이야기  
김문 서울신문 편집국 선임기자

40 "제주 총회, 글로벌 환경 리더십 확보할 절호의 기회"  
김충천 2012 WCC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42 생태보전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 합의 이루길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6 한미 FTA 발효④ 최종  
개성공단, 한국 FTA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윤진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2등서기관

### 연중기획

####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

92 같지만 다른 일본 스타일, 한국 스타일  
니이누마 치카 코코로베이비시터 이사

9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다문화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 나라경제

2012. 09 [제23권 09호 통권 262호]

## 칼럼

- 24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편지**  
바로 여기 이곳이 멀지 않다  
이원규 시인
- 25 김광일과 함께 읽는 책**  
「사랑이 달리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 43 세상에 없던 직업**  
반려동물사진사  
김륜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 50 오소희의 '사람여행' - 브라질**  
산타테레사의 트램 타고 환희 속을 질주하기  
오소희 여행작가
- 58 창의성을 기르는 생각 3.0**  
창의성으로 다이어트를: 빼기와 나누기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 66 향기 나는 삶**  
'마술' 같은 '미술'로 더 가까워진 에티오피아  
박유진 아트앤드허트 포항 양덕 지극장
- 95 도시농부의 농사일기**  
9월, 배추를 지켜라!  
김지숙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신문』 편집장
- 96 그림의 결과 속**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의 '도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 98 시평**  
위기 극복에 대한 재미 경제석학의 유고(遺稿)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b>발행</b>	KDI 경제정보센터
<b>편집</b>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b>발행인</b>	현오석 KDI 원장
<b>편집인</b>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b>편집주관</b>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b>편집위원</b>	기획재정부 민상기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배재웅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김영준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박형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황승현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황계영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민석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하동수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의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b>편집간사</b>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b>편집장</b>	이재열
<b>취재·편집기자</b>	유성임, 권기대, 표초희, 양은주
<b>배포</b>	김경숙
<b>발행처</b>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9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b>전화</b>	02-958-4656
<b>팩스</b>	02-3295-0748
<b>홈페이지</b>	http://nara.kdi.re.kr
<b>e-mail</b>	nara@kdi.re.kr
<b>발행일</b>	2012년 8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3권 09호(통권 262호)
<b>등록일</b>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b>기사 문의</b>	02-958-4634
<b>광고 문의</b>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b>구독료</b>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b>제작지원·인쇄</b>	(주)성우에드컴
<b>사진</b>	이래스튜디오

50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 장인 匠人

# 작품 박람회

## KOREA MASTER ARTISANS' EXPO 2012

대한민국 프리미엄,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

기능한국인



도자기  
보석·금속  
목공예  
창호제작  
섬유·패션  
일반공예  
산업분야  
서비스

서울 양재  
aT센터

2012  
9.13<sup>목</sup>  
9.16<sup>일</sup>

[www.장인작품.com](http://www.장인작품.com)  
[www.masterhandexpo.com](http://www.masterhandexpo.com)

지난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회담 직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urozone



● Greece

지난해 6월 그리스 아테네 도심의 의회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정부 재정 긴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 Japan



현재 인도는 심각한 기온으로 수확기에 해당하는 4분기에 물가불안과 경제 성장을 위축이 예상된다. 사진은 인도의 아마다바드 교외에서 한 남성이 목화실을 건조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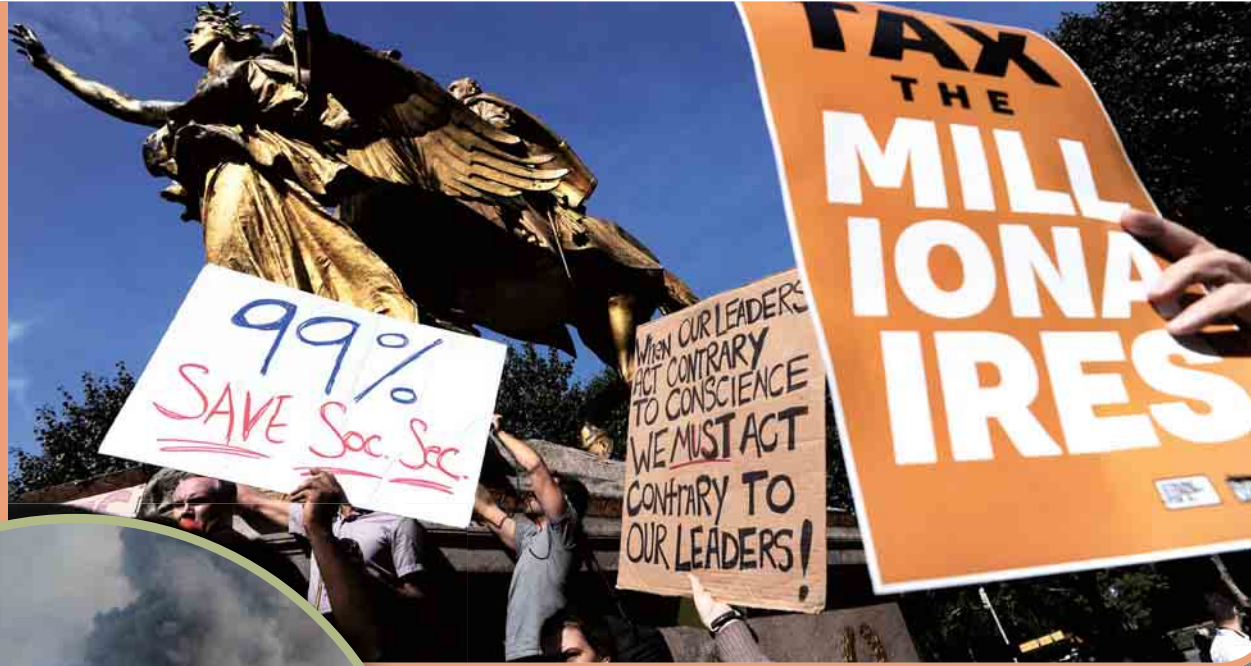
● China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건설·기계·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요 급감으로 3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 India



# SPECIAL THEME



지난해 10월 금융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와 청년실업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해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1만9천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엔(약 238조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으며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산토스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 작업이 한창이다.

##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나

세계경제에 R(Recession, 경기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려는 찰나 유럽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유례없는 침체기에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떠올리고 2013년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거라 점치기도 한다. 글로벌화로 각국의 경제가 밀접히 연관되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 얼마 전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주요국의 성장 예상치가 낮아지는 등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그렇다면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는 계속 높아만 질까? 위기의 진원지였던 유로존 현상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나라경제』가 각 권역별 경제 실태를 진단하고 전망해봤다.



지난 7월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주식시장

# 전환기의 세계경제, 기रो에 선 한국경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ojunggun@korea.ac.kr

○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반침체하던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힘입어 2010년 초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미국 국가부채한도 증액 문제 대두를 계기로 미국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발해 세계경제를 다시 동반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 선진국·신흥국 가리지 않는 경제 부진

이번 세계경제 침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80~1990년대와는 달리 위기가 구미선진국에서 발생해 선진국경제는 물론 2008년 위기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국·인도 등 신흥국마저 흔들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둘째, 위기의 근본 원인인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아졌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크게 증가해 2011년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유로존

의 경우도 2011년 국가부채비율이 그리스 166%, 이탈리아 121%, 포르투갈 106% 등 100%를 상회하면서 재정위기를 촉발시켰다. 그 결과 2008년과는 달리 재정정책의 여지가 없어지고 가치가 폭락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신용경색이 심화,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자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으로 위기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대응요법일 뿐 궁극적으로는 가계와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디레버리징돼야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침체와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경제주체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이너스 GDP 갭이 미국은 2016년까지, 유로존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고프(Rogoff) 하버드대 교수는 이러한 이번 경기침체를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제2의 대수축(The Second Great Contraction)'으로 명명했다.

넷째, 이번 위기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세계경제

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전환기에 발생하는 혼란과 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주도국이 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되지 않도록 기축통화를 공급하며, 심지어 세계안보를 위해 경찰국가의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등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해 마침내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환기에 기존 주도국은 누적된 부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새로운 주도국은 준비가 안 돼 혼란과 위기가 초래된다.

2차대전 이전 팍스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에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팍스아메리카나가 저무는 지금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을 계기로 세계 GDP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동아시아의 비중은 현저하게 커지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잠재적 주도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역할은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점이 이번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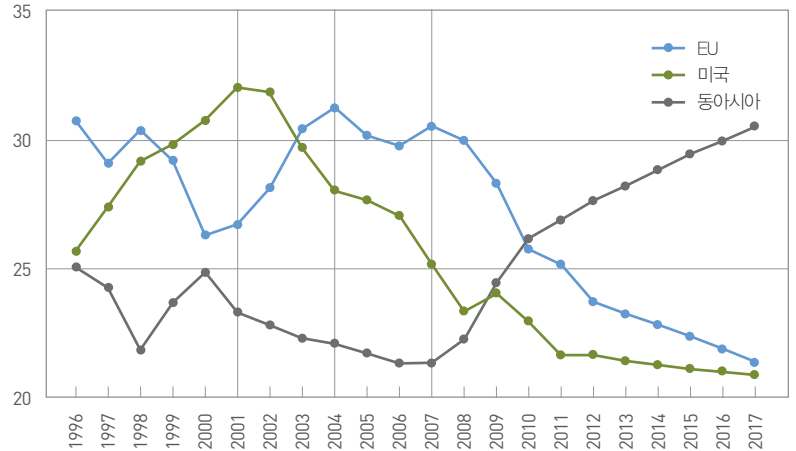
### 韓, 단순 경기침체 아닌 경제 구조변화 예상돼

세계경제 위기가 이처럼 장기화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수출이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23.6%에서 급락하고 있다. 저성장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급감하고 투자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평균성장률은 2.6%로 주저앉았다.

이번 경기침체를 단기적 경기변동 사이클로 보면, 경기종합지수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1월을 정점으로 1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곧 저점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기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외적으로 미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유럽위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이 됐던 중국경제도 이번에는 경착륙

〈그림〉 세계 3대 경제권역 GDP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년)



주: 2011년 이후는 IMF 추정치 기준 /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12. 4

경고음을 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2008년 9월 이후 4년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가계신용도 911조원(2012년 1분기 말)에 달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융위기 수준의 수축(1996년 3월~1998년 8월: 29개월)은 아니지만 적어도 카드 대란 때 정도의 수축(2002년 12월~2005년 4월: 28개월)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이번 경기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한편 보다 시계를 넓혀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한국경제 침체는 단순한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경제가 1963~1991년 평균 9.5%의 고성장과 1992~2011년 평균 5.1%의 중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1959~1973년 평균 8.9%의 고성장과 1974~1991년 평균 4.2%의 중성장기를 지나 199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0.8%의 저성장기에 있다. 그런데 저성장기에 진입한 1992년 전후 버블붕괴로 자산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부채는 증가하는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소비 위축과 금융부실이 초래됐고 그런 문제 해결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됐다. 엔고와 고임금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도 저성장기 진입에 한몫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가 예사롭지 않고 금융부실 증가, 재정악화, 기업해외투자 증가도 만만치 않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본과 20년 시차를 두고 저성장기에 진입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

# 유럽 강타한 은행·재정·경제위기 삼중고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  
wkim@kcof.or.kr

◎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역시 2년 여간 지속된 재정위기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각각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리스는 결국 2차 구제금융과 채무조정도 겪었다. 지난해 11~12월에는 이탈리아의 국채시장이 큰 불안 양상을 보였고, 지난해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스페인이 요즘에 초점이 되고 있다. 은행권 구제금융에 이어 재정에 대한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고조되고 있다.

유럽의 위기 중 두 번째는 은행위기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은행의 부실이 확대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유럽 각국 정부는 은행주식 매입 및 은행채 보증, 국유화, 부실자산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2010년 중반까지 투입된 재정 규모는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0%에 달한다. 이후 은행 사정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은행이 보유한 남유럽 정부채의 부실로 다시금 건전성 및 유동성 악화를 겪었다. 최근 대출 부실이 증가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자본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발생할 부실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유로존 각국의 구조적 불균형 가속화 추세

세 번째 위기는 경제위기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유로존의 경기침체는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됐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 4분기 -0.3%로 하락했고, 올 상반기 중에도 -0.1% 내외의 감소세를 보였다. 긴축정책 여파로 내수가 급감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 수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각국의 실업률은 동반상승 중이다. 이런 와중에도 남유럽과 북유럽 간 거시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남유럽은 과도한 차입과 큰 폭의 경상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특히 독일은 막대한 경상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경상수지 불균형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막대한 경상적자는 GDP 차감 요인이 되고, 경상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외부차입 증대는 이자비용 증가를 유발해 결국 내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외채 과다 인식으로 외국인들이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요즘 남유럽 국가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남유럽 경기의 개선과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전체 경기 회복도 그만큼 더딜 것이다.

유로존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경제위기는 공교롭게도 서로 연관돼 있다. 세 가지 위기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재정취약 상태에서 2009년 은행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입 확대는 결국 재정위기를 불렀고 재정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긴축이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다. 경제위기는 민간대출의 부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 아테네 중심가

실 확대로 이어져 다시 은행위기를 낳는다. 은행위기는 대출 축소를 유도해 경기위축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은 더욱 부실해진다. 재정이 부실해지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투자자 손실이 확대돼 재차 은행위기를 심화시킨다.

### 남-북유럽 간 차별화된 성장정책 운용 필요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어 보인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은 경제위기를 부르므로 무작정 강화할 수는 없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긴축의 GDP 수축 효과도 여타 국가들보다 크게 나타나 긴축을 하더라도 정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은행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다시금 재정위기 해결을 지연시킨다. 또한 현재로서 선각국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로존은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방화벽 확대 및 ECB의 발권력 활용, 은행동맹, 재정연합 등의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도 각기 규모 과소 및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유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문제, 기간 소요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응책들의 개별적 실행만으로 유럽의 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고 이들 모두를 혼합한다 해도 구조적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대응책들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남-북유럽 간 차별화된 성장정책의 운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북유럽은 재정건전화보다는 지출과 내수를 늘려 수입을 확대하고, 남유럽은 재정긴축을 지속하면서 임금과 물가를 하락시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북유럽은 자국 내 취약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신설해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이 지역으로 남유럽의 노동 및 상품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시정책으로, 남유럽은 임금 등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협약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차별화된 성장정책 운용으로 위기국의 경쟁력과 성장률이 제고된다면 방화벽의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고, ECB 자금에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성장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재정통합과 유로본드 도입도 앞당길 수 있다. 복합적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불균형 해소라는 기초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각종 대책을 복합적으로 곁들여 장기적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김희영



## 빛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그리스

○ 그리스 경제위기를 취재하며 만났던 인물 중 초등학교 교사인 나타샤 디마는 그리스의 현 단면을 잘 보여줬다. 그녀의 월급은 공무원 임금감축 조치 탓에 올해 초 1,200유로에서 600유로로 반토막이 났다. 여름방학 중인 그녀는 매일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으로 소일한다. 7~8유로인 커피에 빵을 곁들이면 족히 10유로는 된다. 그녀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가서 일하길 바란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잘사는 나라에서 일하며 수입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한 달 600유로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10유로 가까이 될 스타벅스 커피 값을 어떻게 벌충할지 의문이 생겼다. 그 의문은 통역을 맡은 아테네 거주 한국교민이 풀어줬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려도 이들은 신용카드를 예닐곱 개씩 갖고 다니며 예사로 씁니다. 성탄절 같은 명절 때 과시성으로 선물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선거를 두 번 치른 끝에 겨우 성사한 그리스 연립정부의 형편도 나타샤와 비슷하다. 최근 그리스 재무관리청은 40억6천만유로의 3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T-bill)을 역대 최고 이자인 4.43%에 발행했다. 이로써 들어올 자금은 곧 만기가 닥치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진 빚 32억유로를 갚거나 이자를 내는 데 쓴다.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다.

지난 총선거에서 유로화를 계속 쓸지 말지 말이 많았다 보니 나라 전체는 아직도 뒤숭숭하다.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관광수입은 급감했다. 위험을 느낀 외국 투자는 끊긴 지 오래고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 기업도 자꾸 빠져나간다.

여기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래야 돈을 더 꺾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과 내후년 중 115억유



지난 7월 29일 아테네의 한 상점에 걸린 티셔츠에 'Greek Crisis: No job, No money, No problem'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연금과 공무원 임금을 깎고 의료보험을 줄이지 않는 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어느 대목을 줄여야 할지 정부 내 이견은 여전하다. 애초 과반수 정당의 내각이 아니라 제1당과 3·4위인 소수당이 결합한 연립정부인 탓이다.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는 최근 그리스 재정을 심사해 9월 중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대출규모와 대출방식을 결정한다. 5년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빚 상환이나 재정긴축 목표연도를 2~3년 늦춰달라고 요구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트로이카에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도 그리스를 둘러싼 외국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트로이카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독일 정부와 정당 지도자들은 최근 그리스를 압박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그리스를 퇴출시키는 게 낫다”거나 “더 이상 그리스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이다. 이는 그리스 퇴출 시 나올 '도미노' 감염을 차단할 '방역'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그리스 경제의 운명이 그리스의 '살처분'으로 결론 날지, 그리스가 살길을 찾아 몸부림칠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남희경**



**양태삼**  
연합뉴스 부다페스트 특파원  
tsyang@yna.co.kr



France

## 경제위기 여파 식탁에도... 에피타이저 · 후식은 생략!

● 프랑스에선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전식, 본식, 후식으로 구성된 메뉴를 먹는다. 세 가지 코스가 부담스러울 땐, 그 중 두 가지를 골라 먹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파리에선 본식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레스토랑들이 늘었다. 직장인들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공원에서 샌드위치나 크레페 등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독일에 이어 유로존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유럽 재정위기 충격파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인 PSA 푸조 시트로앵은 파리 인근 생산공장 한 곳을 폐쇄하고 8천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에어 프랑스도 내년까지 5천명의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되자 소비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었다. 지난 6월 프랑스의 소비자출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특히 지난 2분기 공산품 판매는 전분기 대비 0.6% 하락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직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째 연속 제자리걸음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은 것이다.

아슬아슬한 프랑스 경제를 떠받치는 것 중 하나가 명품과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프랑스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샹젤리제와 몽테뉴 등 고급 명품 매장의 가장 큰 고객은 단연 중국인이다. 각 매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중국인 점원이 있어 이들의 구매를 돕는다. 루이비통과 동 페리농 샴페인 등을 판매하는 프랑스의 대표적 명품 기업인 LVMH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나 증가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프랑스 유통업체는 갖은 묘책을 짜내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여름 정기세일 때 상점들은 최대 70%의 파격 세일을 진행했다. 프랑스 언론들의 비공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여름 정기세일 판매액은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지난해에 비해 5% 안팎 증가했다.

17년 만에 탄생한 좌파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도 경제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우선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신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 당장 유럽 무대에서는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실시하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에 최고 75%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기업·기업인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불황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당근책도 잊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커진 불법 이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를 대거 추방했다. 좌파 정권으로선 의외의 조치였다. 올랑드 정부는 당분간 이런 이중적 정책 행보를 통해 양극화에 지친 민심을 다독이면서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성장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링크



지난 7월 25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PSA 푸조 시트로앵 직원들이 회사 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성훈**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inout@chosun.com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dkcho@mju.ac.kr

◎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의 선거 캠페인은 '변화'(Change)와 '우리는 할 수 있다'(We can do)로 요약된다. 2차대전 이후 사실상 최초로 맞는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를 달래고 희망을 주기에 그보다 더 좋은 캠페인은 없었다. 하지만 '케인지언'인 오바마에게 'Change'와 'We can do'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총 7,827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총 8,578억달러 규모의 「세금공제 및 고용촉진법」을 시행했다. 이렇게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침체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현재 미국경제의 딜레마는 가용한 재정과 통화정책

을 모두 구사했지만 여전히 성장은 굵뜨고 실업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급기야 지난해 8월 신용평가기관 S&P에 의해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IMF, 美 연간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올해와 내년의 실질성장률을 각각 1.8%, 2.2%로 전망하고, 4월 보고서에서는 각각 2.1%, 2.4%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정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 2.3%로 낮췄다. 경제에 활기가 걸려진 상태에서 '하방위험'(downside

# '갑작스러운 재정지출 감소' 우려 증폭 ... 해답은 부채 감축뿐

미국 워싱턴D.C의 의회사당



risk)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방위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로존'의 불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절벽'이다.

국가재정 부도사태에 이르자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예산 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하고, 국가부채한도를 2013년까지 16조4천억달러로 2조1천억달러 상향조정하는 대신 2022년까지 1조2천억달러의 정부지출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채무한도를 증액시켜 시간을 번 다음 재정적자 감축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지자는 것이다. 지출감축액 1조2천억달러는 국방비와 비 국방비로 절반씩 나누고, 구체적 사항은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기구인 '슈퍼 위원회'를 만들어 정하는 것이다. 정부지출 삭감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여기에 '재정절벽'의 복병이 숨어 있다.

올해 12월 31일에 그간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됐던 각종 '감세조치'가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통제법」에 의거해 지출감축이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만약 미 의회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각종 부양대책은 종료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자동적으로 줄게 된다.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지난 3월 분석에 의하면, 「예산통제법」에 따른 긴축재정이 예정대로 시행돼 재정절벽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5,600억달러(2013회계연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 1조2천억달러(GDP 대비 -7.6% 추정)에서 2013년 6천억달러(GDP 대비 -3.8% 추정)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절벽으로 재정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지만 경기하강은 불가피하다. 의회예산처의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절벽이 가시화될 경우 전년 대비 실질성장률은 0.5% 성장에 그치지만 재정지출 축소가 전혀 없으면 연간성장률은 4.4%로 추정된다. 결국 재정절벽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3.9%p로 계산된다. 종합하면 재정절벽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6%p 개선시키지만 GDP 자체를 3.9%p 낮춘다. 적자누적은 '내일'의 문제지만 경기위축은 '오늘'의 문제다. 따라서 재정절벽 그 자체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도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연준이 나서서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 연장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부양책 연장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유층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

당은 「의료보험개혁법」 폐지,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를 중심으로 한 세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 간 견해 차가 커 재정절벽 회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3의 대안으로 '양적완화 조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연내 3차 양적완화(QE3)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 의회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를 유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두 차례의 양적완화 조치도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3차 양적완화 조치는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인위적 성장에 따른 거품 경계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치명적 유혹'이었다. 2007년까지 미국의 성장은 부동산거품에 기초한 것으로, 저금리에 기댄 '비이성적 과열'이 만들어낸 성장이었다. 미국경제에서 소비는 '미덕'이었고 '부채'는 '자산'이었다. 대출금리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높았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파생시장 규모는 700조달러에 이른다. 20년 전 10조달러에서 70배나 팽창한 것이다. 세계 GDP(60조달러)의 10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파생상품이 필요하지는 않다. 파생상품은 차입의 결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돈을 빌렸고 소득이 있는 사람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빌렸다. 부동산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주택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장률보다 부채증가율이 끝까지 높을 수는 없다. 인위적 저 이자율에 의한 신용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돼 있다.

미국경제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시각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경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케인즈 경제학에 기초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 대응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진 이유는 인위적 저금리로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고 조세 수입 이상 지출을 해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쌓였기 때문이다. 이자가 지나치게 낮고 지출이 과다해 생긴 문제를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지출을 늘려서 해결하긴 어렵다.

상론할 겨를은 없지만, 민간 부문은 소득과 자산에 걸맞은 수준까지 부채를 줄여야 한다. 재정건전성도 결국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케인즈적 처방은 문제를 뒤로 미룰 뿐이다. [14]

# 낙관론 vs 비관론 팽팽해... 중서부 대개발로 불황 극복 나설 것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  
mhlee3212@gmail.com

◎ 중국정부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적을 7.8%로 발표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31개 성시로 구성된 중국 전체를 불황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열대와 한대가 공존하듯 경제적으로도 온대와 냉대가 공존하고 있다. 선진권 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동부지역은 분명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베이징시(7.2%)와 상하이시(7.2%), 광둥성(7.4%)과 저장성(7.4%) 등은 올 상반기 7%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들은 아직도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여전히 고층빌딩이 매일 들어서고 있는 빈하이신구가 소재한 톈진시는 1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12개 성시로 구성된 서부지역은 13.2%, 6개 성으로 구성된 중부지역도 12.9%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 수출·내수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진정세로 진입

올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명목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투자는 20.4%, 수출은 9.2%, 소비는 14.4%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1~2010년) 연평균증가율과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은 2.7%p, 투자는 2.7%p, 소비는 0.5%p씩 감소한 데 비해 수출은 무려 11%p나 감소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시 수출이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내수에도 문제는 있다. 투자에서는 2010년 5월 신36조(민간투자 활성화조치) 발표 이후 민간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 특히 동부지역 지방정부들의 투자가 부진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했던 대규모 부채의 상환시기가 임박하면서 지방정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그러나 불황 속에도 가구(25.1%), 화장품(16.3%), 석유제품(17.6%), 제약(24.0%) 등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빠른 속도로 안정되면서 하반기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책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6.4%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2분기에는 3.3%로 낮아지면서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4% 이내로 들어왔다. 특히 7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떨어졌다.

올해 말 정권 이양을 앞두고 중국정부의 경제관리 목표는 연초 물가안정이 최우선이었으나 5월부터 성장우선으로 선화하면서 내수확대와 일자리, 특히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2008년과 같이 8% 성장을 위한 '바오바(保八)정책'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0년 이후 견지해오던 긴축금융정책을 지난해 말부터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명확하게 확대금융정책으로 전환했다. 지불준비율이 세 차례,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압박도 해소해 주고 있다.

중국정부가 금융정책에서 확실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정책에서는 화끈한 내수부양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절감 정책을 소비지원 정책과 결합해 향후 1년간 363억위안(한화 6조5천억원)의 재정보조금을 경기부양책으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2009년의 4조위안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아직은 중국정부가 현재의 불황 국면을 통제범위 내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하반기 8% 성장 위한 강력한 내수부양책 예상돼

이제 관심은 올 하반기 중국경제의 향방에 모아지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중국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낙관론자들은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강력한 내수확대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힘입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경제가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서방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관론자들은 선진권

의 구조적 불황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 겹치면서 중국경제가 이미 중장기적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국경제의 실물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상유지와 경기침체의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다. 소비액, 전기소비량, 화물운송량, 구매자 관리지수(PMI) 등은 계속 하향세를 보여 경기침체 진입의 신호를 주고 있다. 반면 산업생산, 총통화량 등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경기의 상승세, 즉 8%대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통화량 증가에 힘입어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8% 성장달성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 주요 전망기관과 투자은행들 대부분이 올 하반기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8% 이상으로 전망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관마다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씩 차이는 있다. 대부분 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올 7월 전망치를 5월 전망치에 비해 0.2~0.6%p씩 하향조정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6월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5월 전망치보다 0.4%p 상향조정했다.

주지하다시피 오는 10월에 중국은 정권이양이 예정돼 있다. 후진타오 시대 10년을 경제성장률 7%대로 마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내수부양책이 하반기에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이 이미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하나만 10조위안대의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6.9%, 재정적자 비중은 1.6%에 불과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내수부양책에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제12차 5개년 계획 목표치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 중국경제가 지난 30년간 10%대의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8%대로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말 유럽 불황기에서 신생경제국가인 미국이 서부개척으로 불황을 극복했듯 지금 중국도 중서부 대개발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인다. 불황과 호황이 공존하는 중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 한국의 대중국 진출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동부지역에는 도처에 코리아타운이 있지만, 호황이 예상되는 중서부 지역에는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없다. 나미

〈표〉 세계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2012년			2013년		
	2012.5	2012.7	변동	2012.5	2012.7	변동
IMF	8.2	8.0	-0.2	8.8	8.5	-0.3
OECD	8.5	8.2	-0.3	9.5	9.3	-0.2
WB	8.2	8.6	0.4	8.2	8.6	0.4
UBS	8.5	8.2	-0.3	8.5	8.5	-
ADB	8.5	8.2	-0.3	8.7	8.5	-0.2
Goldman Sachs	8.5	8.1	-0.4	-	-	-
Morgan Stanley	9	8.5	-0.5	8.6	9	0.4
Deutsche Bank	8.5	7.9	-0.6	8.6	8.4	-0.2

주: 괄호 안의 시기는 전망 시점을 나타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moosup.jung@samsung.com

◎ 중국 다음으로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브라질 등 넥스트차이나 신흥국경제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아래 허덕이고 있다. 특히 연초의 이란발 유가불안에 이어 최근 심각한 가뭄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은 물가에 취약한 신흥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규모의 저소득층 인구를 중심으로 이뤄진 신흥국경제에서 물가상승은 곧바로 생계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 만성 적자 속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

지난 8월 9일 발표된 인도의 2분기(3~6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0.1%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8월 말 발표될 2분기 GDP성장률 또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이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2분기의 GDP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생산지수는 인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전력, 광업 부문의 생산만을 나타내지만,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지난 1분기에 9년 만에 가장 낮은 5.3%의 GDP성장률을 기

록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와 전력생산 감소가 겹치면서 2012년 하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들은 2012년 인도경제의 성장률을 6%대로 예측하고 있으나, 가뭄 해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대로의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경제의 부진에는 다소 구조적 측면이 존재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구조, 만성적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구조가 그 내용이다. 먼저 고물가 구조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식료품·연료가격의 높은 상승률에 기인한다. 최근 경제의 고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식료품 및 연료소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정책당국은 8%의 높은 기준금리(재할인율)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도는 심각한 가뭄으로 수확기에 해당하는 4분기에는 물가불안과 경제성장률 위축까지 예상된다. 농업생산이 전체 인도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반될 신흥국의 지속성장

지난 6월 28일 국제축구연맹(FIFA) 조사단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보수공사가 한창인 브라질리아의 국립경기장(마네 가르신사) 건설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여기에 만성적 재정적자구조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고금리에 의한 국제이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 세수의 증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정부주도 투자지출에 의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1년 1분기 13.6%에서 2012년 1분기 4.1%로 낮아지면서 전체 GDP성장률인 5.3%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외 부문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구조가 문제다. 인도는 원유 등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루피화약세가 수입량 감소보다 달러표시 수입액 증가효과로 나타나 지난 6월에도 월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원유 수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 요인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2011년 27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1~5월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155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 이케아,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확대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4년 총선에 대비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1조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의 시행이 2012년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존도 높은 브라질도 주춤...

#### 월드컵·올림픽 준비 투자로 성장세 회복 전망

한편 인구 2억명에 GDP 2조5천억달러로 전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브라질 또한 2012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

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금융 부문에서 유럽의존도가 높다 보니 유럽위기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브라질의 EU 수출 비중은 20.7%며, 전체 은행차입에서 유럽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에 달해 실물보다 금융 부문의 충격이 크다. 특히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64%를 차지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브라질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반면 2013년에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3%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 등 자원 수출에 기반한 러시아경제 또한 유럽위기의 지속과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2012년과 2013년 모두 4% 이상의 높은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중국 이외의 브릭스 국가 또한 현재 진행형인 유럽위기와 각국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구와 자원을 두 축으로 전 세계의 성장동력이 돼 온 이들 신흥국의 지속성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점점 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과 경제력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신흥국 진출 확대, 신흥국 로컬 시장 및 로컬 기업의 부상, 신흥국 기업의 선진국 기업·자산의 인수합병 확대,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이러한 경제의 판도 변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경제 또한 이러한 큰 흐름을 활용하려면 투자, 무역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신흥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통화가치 하락 등 지금의 신흥국경제 위축을 오히려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양경제





# 내수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경제구조 튼튼히



**이역원**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ewlee@mosf.go.kr

◎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도화선이 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아직 본연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과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 충격만 잘 극복하면 세계경제가 곧 정상궤도에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론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위기의 원인이 유로존 메커니즘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있고 위기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8년의 위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랫동안 내리는 장맛비와 같은 형국이다. 이제는 장기화되는 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수출 둔화되고 내수회복 제약받는 한국경제

그간 우리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 탄탄해진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대외충격들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해 왔다.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경기회복세가 미흡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전하는 편이며, 고용시장의 호조도 지속돼 왔다.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은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인정받아 오히려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수출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세계경제의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수출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내수활성화 노력이 긴요하다. 고용개선이 이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내수여건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심리 불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 등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내수 지표들은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점차 둔화되는 조짐이다.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로 작용해 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수 부문의 활력을 북돋기 위한 강화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하반기 8조5천억원 재정투자 외 추가방안 마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거센 폭우를 헤쳐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드리운 안개가 언제쯤 걷힐지 기늠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긴 호흡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포스트 시즈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매 경기마다 총력전을 펴야 하겠지만 페넨트 레이스와 같은 장기전에서는 시즈 전체를 내다보는 선수 운용이 필요한 법이다.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정책여력 확보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와 여력이 제한되면서 창의적 정책방안 발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작더라도 효과 있는 정책과제를 모아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편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과 타이밍이다. 대외 부문의 어려움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기 전에 발 빠르게 정책효과를 가시화해야만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을 방지하고 내수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1일 대통령 주재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개최돼 소비, 주택 거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제 정책으로 조속히 반영하고 추가적 내수 활성화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는 7월 말부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의 집중적 운영을 통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신규과제 발굴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미 발표된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 재정투자 보강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위기 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위기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외화예금 확충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제는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생변수이자 자기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병목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창의적 대안을 적극 발굴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 기반 마련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기업, 가계, 정치권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결집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고 가계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의 아래 기업과 가계의 경제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활기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한경**

# 바로 여기 이곳이 멀.지.않.다.

무련(無蓮), 그대는 분명 마술사입니다. 그대가 지나간 모든 발자국 위에 풀잎이 돋고, 그대의 눈빛이 닿은 곳마다 환하게 꽃들이 피었습니다. 대체 어인 일입니까. 그대가 어루만진 나무마다 상큼한 과일이 열리고, 그대가 부른 한 소설의 노래는 어느새 내내 그치지 않는 계곡 물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사는 그곳에 가고 싶어 밤새 안달을 하다가도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화두 하나를 잡고 지리산 자락의 텃마루에 나와 공복의 담배를 피웁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지 못할 곳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모터사이클을 타고 내달리면 두 시간 거리인 해남의 땅끝,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 언제나 그리운 보길도가 있지요. 제주도의 우도가 그러하고, 순천의 선암사와 고창의 선운사 그리고 곡성의 태안사와 문경의 봉암사로 가는 숲속의 비포장 길이 한여름에도 서늘한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동해의 감포 앞바다나 서해의 변산반도, 남해의 금산이나 여수 향일암의 아침도 문득 지리산 노고단의 구름바다와 클로즈업됩니다. 불일폭포의 물줄기처럼 쏟아지는 그곳, 그곳의 기억들이 다시 한 번 무련, 그대의 발자취로 되살아납니다.

내가 가본 그 모든 곳에서 잠시라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고, 그대 또한 내가 가본 그 모든 곳에 가지 않은 적이 없었지요. 그대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풀잎이 돋고, 그대가 바라본 모든 곳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산방의 차실로 자리를 옮겨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은 참으로 먼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참으로 가깝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닫혀 있고, 지리산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리산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서울이 아주 잘 보이지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서울은 언제나 안팎의 피로증후군으로 그 표정이 노출돼 있고, 이곳은 그날이 그날인 듯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내면 깊숙이 흐르는 섬진강 물굽이와 지리산의 유장한 호흡이 나날이 새롭습니다.

언제나 허겁지겁 쫓기듯이 사는 마음과, 시간 혹은 공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줄 아는 마음의 차이 때문이겠지요. 무서운 속도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도 그것이 사실은 제자리걸음이라면 삶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느린 가운데 이따금 생의 비밀 혹은 어떤 깨달음이 플래시처럼 터지는 순간순간이 다가온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이 멀지 않다'는 어느 불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굳이 화엄경의 핵심이자 연기법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인드라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속에 그대가 있고, 그대 속에 이미 내가 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를 향하는 모든 길 위에서 문득 미아가 되었습니다. 내 얼굴에 겹쳐진 무련, 그대의 얼굴이 문득 낯선 것도 이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원**



**이원규 시인**  
jirisanpoem@daum.net  
1984년 『월간문학』, 1989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강물도 목이 마른다』, 『옛 애인의 집』 등 시집과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  
『지리산 편지』 등 산문집이 있다.

# 「사랑이 달리다」

심윤경, 문학동네



심윤경 장편소설 「사랑이 달리다」(문학동네)는 21세기 버전 김홍도의 풍속도 같다. 때론 파스칼의 「팡세」를 닮았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느낌도 든다. 무엇보다 매우 재밌다. 등단 10년을 맞은 서른아홉 살 여류작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지랄맞으며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2012년을 관통하는 한국인들의 자화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굴러떨어지고 있는지 독자들 가슴에 저명종을 울린다.

소설 속 주인공은 작가와 같은 나이인 서른아홉 여자다. 결혼했다. 아이는 없다. 작은오빠가 운전하는 빨간색 컨버터블을 함께 타고 카베르네 쇼비뇽을 마시면서 공포의 고속질주를 하는 장면이 소설의 시작이다. 처음 목적지는 천안이었지만 그들은 늘 진입로를 잘못 선택한다. 계획에는 없었어도 한강변을 달린다. 목적지는 사라져도 좋다. 길을 잃어도 된다.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다. 그러나 질주는 한다. 그들이 컨버터블에 시동을 거는 이유는 질주에 있다. 이 장면은 소설 속 인물들의 현실과 꿈,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망가진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럭운전사 출신인 주인공의 아빠는 물류사업에 손대 크게 성공하더니 몇몇 창고부지가 부동산 경기를 타고 대박을 터뜨리면서 부자가 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졸부로서 재력이 행세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변변찮은 아빠는 평소 꿈처럼 이화여대 나온 엄마와 결혼했지만, 지금은 이혼상태다. 아빠는 큰오빠보다 두 살 어린 새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작은오빠는 사업을 한다고 설치더니 금융사고를 쳐댔다. 재력이 아빠조차 손가락을 떨어

뜨릴 만큼 사고가 컸다. 주인공의 남편은 어릴 때 한동네 살던 친구다. 서울공대 출신인 남편은 회사에서 크게 물을 먹고 지방도시 오창에 있는 정밀시스템 개발사업부로 발령이 난다.

큰오빠는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 듯하게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남길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 큰오빠는 주인공에게 거머치려엄마와 아빠에게 달라붙어 살지 말라면서 컴퓨터 수리기사 자격증이라도 따보라고 권한다. 주인공은 작은오빠가 소개한 정옥연 산부인과의 아동용 놀이방에 취직한다. 주인공은 유부남 육연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잔다. 주인공의 엄마는 작은오빠의 돈을 훔쳐 이복 출신 노인 사업가와 맞선 비슷한 자리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다. 작은오빠는 사기혐의로 감옥에 갇힌다. 이 소설은 콩가루 집안의 콩가루 인생들을 약간 과장해서 보여주지만 우리는 언뜻 자화상이 겹치는 느낌을 받으며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진다.

주인공은 감옥에 있는 작은오빠에게 면회를 간다. 이 집 사람들은 피붙이 딸을 갖고 싶어 안달한다. 주인공은 아무래도 육연의 아이를 뺀 것 같다. 이 낚시를 눈치챈 작은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가 조카딸이길 바란다.

세상에는 미치광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루를 살아가고, 아이를 갖고,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렇게 싱크로율 99%의 손톱 같은 미로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가 보여주는 포복절도 에피소드와 비유법은 특A급이다. 이들이 21세기를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발음이 멋지기 때문이다.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kikim@chosun.com  
 1985년 조선일보 기자, 1993~1999년 파리 특파원. 이후 문화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역임. 현 논설위원. 문학담당기자를 하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연재

# 개성공단, 한국 FTA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

다자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1995년 WTO 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1947년 GATT 출범 이후 1994년까지 거의 50년간 FTA는 겨우 91건이 체결됐지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두 배 이상인 222건이 체결됐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 간 WTO를 능가하는 시장개방을 약속해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흐름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즉 WTO가 전 세계를 동시에 개방시키기 위한 대규모 협상이라면 FTA는 소수 국가 간 개방을 진행해 자유무역 흐름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누스의 얼굴을 가진 FTA는 전 세계적 자유무역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체결국 간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협정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결국 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보증서인 '원산지 증명서'는 체결국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통행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체결국은 제3국이 아닌 체결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 증진을 위해 엄격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역외가공인정, 이기주의 뿌리에서 자라난 이타주의 꽃?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인정의 기본원칙은 FTA 당사국 영토에서 완전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위 '영토원칙(territoriality)'이다. 체결국 내에서 제품이 생산돼야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며,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체결국 간의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2011년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는 총 313건으로 특혜무역 아래 교역비중이 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세계 교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이러한 원산지 원칙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역외가공방식이다.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이란 원산지 판정 절차 시 영토원칙에서 벗어나 FTA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 영역에서 생산·가공된 여러 방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해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으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물건가치의 20%, 30% 그리고 50%의 3단계 생산공정을 거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를 제3국에서 가공해 수입한 후 마지막 공정을 다시 당사국에서 제작해 수출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이 물건은 마지막 공정인 50%만이 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두 번째 공정을 거치는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면, 첫 번째 공정과 마지막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총물건가치의 70%가 원산지에서 생산된 것이 된다. 만약 양국 간 FTA 체결 시 체



약국 내에서 60% 이상 이뤄져야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면,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역외가공지역의 인정은 FTA 원산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 어쩌면 이 부분은 경제협정에서 경제적 논리 이외의 변수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이스라엘 FTA 이행법에 있는 요르단 및 이집트 내의 특정공업지구에 대한 FTA 특혜관세 혜택 부여가 이 FTA가 체결된 지 11년, 18년 후에야 인정됐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FTA 협상에서 원산지 원칙의 예외인 역외가공지역을 인정받는 것, 특히 정치적으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에서는 체결국가의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인식유형에 따라 두 가지의 역외가공지역 인정방법이 존재한다. 즉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처럼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을 미리 협정문에 규정한 경우와 EU나 미국처럼 양자 간 추후 협의로 기반을 마련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곳에서 구체적 품목을 정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한미, 한-EU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지리적 구역'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가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북기업 및 외국기업을 유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자유경제지대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 등에서 약 5만여명이 일하

고 있으며 남북한 간 경제협약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등 법적인 장치 아래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까지의 누적생산은 16억달러이며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 및 남북 간 긴장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임금이 저렴하다는 중국·베트남보다도 비교우위가 있는 최저임금(월 67달러)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개성공단을 FTA의 틀에 포함시키는, 경제적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더 큰 대의가 필요하다. FTA의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을 매개로 경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핵우산이 아닌 FTA 우산 만들어야

핵과 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 동맹관계에 더해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 삼각관계의 접점에 한미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존재한다.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북한 전역으로 자유경제제도가 확산되고, 경제적 교류에 의해 정치적 기저인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면 삼국 간의 관계는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한-EU FTA에는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싹틔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젠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채널을 통해 FTA 체결국 정부가 이를 구체화해 개성공단, 아니 더 많은 북한의 경제지역을 FTA 우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sup>국회</sup>



**윤진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2등서기관  
jyoon05@mofat.go.kr

# 인구구조 다양화에 따른 주택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을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때 \_ 2012년 8월 10일 오후 4시  
곳 \_ KDI 세미나실  
참석자 \_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좌장 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정의철**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금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주택 얘기가 나오는 등 부동산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다. 오늘 좌담회에선 최근 부동산시장을 조명해보고 이러한 상황변화가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 또 이에 대응한 정부의 장단기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 대표께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고종완** KB국민은행 통계를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정리해보면, 2012년 상반기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6% 상승해 지난해 4.3%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1.1%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모두 집값이 하락한 반면 지방은 2.4%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시장의 경우는 지난 2~3년과 달리 올 들어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세가격은 1.8%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7.1%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안정세가 나타났다. 올 상반기 주택시장을 결산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주택거래량의 급감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약 46만5천건으로 2006년 전국 주택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지표로는 경매처분건수가 있는데, 수도권의 경매처분건수는 지난해 약 2만9천건으로 2008년 약 1만5천건에 비해 두 배 급증함으로써, 가계부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철** 고 대표 말씀을 들어 보니 부동산 실물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겠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책의 효과는 어땠나?

**서승환** MB정부 부동산대책을 시기별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2008년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보급과 관련한 대책이 발표됐다. 2010년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전세 등 임대주택 대책이 있었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매매가격의 약세 또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에 대한 기대변화가 있었고, 보금자리주택 저가 공급에 의한 거래부진이 지속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규제 관련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좌장 겸)

**고종원**  
RE멤버스 대표

대책이 나왔다. 임대주택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금리조건 완화가 핵심인데 혜택을 받은 계층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효과의 크기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또 임대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5.10 대책의 경우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대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한참 늦은 시기에 나온 거라 사실상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지만, 시장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종원** 우선, 지난 5년간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해볼 때 시장 관점에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지난 참여정부 때, 즉 부동산 활황기에 만들어진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제도 등이 MB정부 들어 4년 넘게 부동산 불황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등은 정부가 폐지하기로 발표했지만 후속조치 미흡에다 국회 입법과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아

직까지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라고 할 수 있다. 고강도 규제정책의 지속으로 부동산 신규 구매층이 급감하고 실수요자의 구매욕구 제한으로 자가주택 대신 임대주택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를 동시에 양산, 시장참여자 모두가 루저가 되는 시장 왜곡, 시장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정의철** 고 대표 말씀처럼 부동산시장은 현재 집 가진 사람은 가격이 떨어져서 행복하지 않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가격이 올라 행복하지 않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올 12월 대선과 맞물려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겠나?

**서승환** 현재 시장에서 논의된 것 중에 정책화되지 않은 것은 DTI 규제완화, 분양가자유화 정도다. DTI 규제완화의 경우 현재 청년층과 자산 많은 고령층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포

공급 측면에선 1인 가구 증가, 주택 수요유형  
다양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총량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니드 베이스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민간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며 공공은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되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서승환 교수

함시켜 DTI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떠나 DTI 규제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은 옳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평생소득을 제대로 계산할 만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연말까지의 상황만 가정한다면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 핫이슈 중 하나가 하우스 푸어 문제인데 그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효과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민간택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분양가를 자율화하지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정책 역사상 분양가규제는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규제가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는 어렵다고 본다. 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 주택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능력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다.

**고종완**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다. 정부 발표 후 3년째 입법통과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실행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부절,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부담 완화와 DTI,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금융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와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올해는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선거변수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장기 침체는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문제뿐 아니라 내수와 금융부실, 실물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 면에서도 주택·부동산 경기의 불황 영향력은 매우 큰 편이다. 주택 매매·건설뿐 아니라 이사·인테리어·가구 등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956만명으로 전 가구의 20%에 해당된다. 여기에 일용직이 약 120만명으로, 저소득층은 일자리 측면에서 부동산·건축 경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실물경제, 내

수경기, 금융부실 방지라는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살펴 봐야 한다.

**정의철** 지금 가장 핫이슈가 하우스 푸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어떤 방안이 있겠나?

**서승환** 하우스 푸어에 대해선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구입해서 예정대로라면 3년 정도 지나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본이득을 챙기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주택가격이 빠지는 바람에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하우스 푸어 문제의 요체다. 결과적으로 개인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원리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의 경우도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거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인데 지금으로선 이를 은행에 강요할 수도 없고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며, 만약 대출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종완** 현재 하우스 푸어가 157만가구 정도 되는데 특히 수도권가구의 약 17%가 하우스 푸어에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 단순한 만기연장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진국형의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모기지재금융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저리의 고정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



정의철 교수

시장기능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되, 꼭 필요한 분야에 규제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시장수요와 여건에 맞게끔  
사업수행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고종완 대표

과거 부동산정책은 소득 베이스였다.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다양화되는 만큼 라이프 사이클도  
정책의 잣대가 돼야 한다. 노인계층의 수요가  
다르고 청년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기초한 조금 더  
세분화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출제도 확대, 30년 이상 장기모기지론제도 확충 등 주택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의철** 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정상  
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만약 대출상  
환이 문제가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것이 부실대출이  
될 것인 만큼 은행 스스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어떤 구조  
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상  
환자금을 일시 완회시켜 주고 그것을 뒤로 좀 이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각각의 은행이 안고 있는 대출여건  
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  
겠다. 이제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시장침체 문제가 해  
결이 쉽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  
다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서승환** 최근의 주택거래 부진은 경기침체와 미래 주택가  
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  
서 부동산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  
이 성장을 회복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경기 동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1년 4분기 이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을 것  
이다. 상가주택 대출 부실화 문제는 주택보다 더 심각하  
다. 이러한 문제들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효과가 의문시되  
는 상황에서 세계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한다면 향후 1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볼 때 주택시장은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 상태로 옆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치고 올라갈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고종완** 다행히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과거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면 2001년에서 2006년 집값이 상승할 때 미  
국이 약 100%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46% 상승에 그쳤  
고, 영국이 약 200%, 스페인·아일랜드가 약 250% 급등  
했다. 주택경기가 고점을 찍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5  
년 넘게 장기 하락조정을 거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추가적 급락이나 폭  
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진정, 규제완화정책의 가시화, 펀더멘탈 요인의 개선 등  
이 이뤄진다면 올 하반기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아  
니더라도 보합세로의 전환, 즉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  
의 회복세는 전망된다.

**정의철**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경기회복이 잘 안 되면 기대심리가 비관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서울 잠실의 한 상가에 밀집된 공인중개사사무소들

밖에 없다.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 같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경기가 지금 예측한 것보다 좋아진다면 그것이 부동산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는 거시경제 여건이든 간에 기대심리를 조금 더 올려주는 역할이나 기회가 있다면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부동산정책 원칙과 방향에 대해 제한할 점을 말씀해달라.

**서승환** 현재 정책수행 여건이 과거와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공조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일본은 추세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다. 추세는 다른 나라들이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공조를 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실효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택경기 변동에 대응해 과거와 같이 주택정책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일정한 원칙(fixed rule)을 기본으로 지역별·시기별로 약간씩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진전, 주택 수요유형 다양화, 인구증가를 둔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총량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니드(need) 베이스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민간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은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되 임대주택 재고(stock)를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주택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 기간 중 하우스 푸어 문제와 과도한 월세전환을 문제만 적절히 해결된다면, 한 5년쯤 지나 장기고정금리모기지(FRM; Fixed Rate Mortgage)의 운용이 가능해지고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고종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101.9%)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저출산·저성장·저금리 등 부동산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부동산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정책기능도 시장변화에 따라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만큼 민간과 공

공의 역할도 목표와 기능에 따라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시장기능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되, 꼭 필요한 분야에 규제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사업도 시장수요와 여건에 맞게끔 사업수행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재건축은 사유재산에 기초해 민간 자율성을, 재개발은 공공성에 기초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통계도 좀 더 정밀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표적 지표로 PIR(Price Income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꼽을 수 있다. PIR은 객관적 지표임은 분명하나 각국의 주택가격 조사대상, 방법과 기준에 따라 PIR의 결과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종래 방법에 의한 PIR만 산출·발표할 게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따른 다각적 지표의 산출 및 발표도 고려할 만하다.

**정의철** 부동산정책은 워낙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이 불확실하면 경제주체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서 교수 말씀처럼 픽스트 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시기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이뤄지는 형태. 그런 예측 가능성만 확보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각자가 알아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과거 부동산정책은 소득 베이스였다.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다양화되는 만큼 라이프 사이클도 잦대가 돼야 한다. 노인계층의 수요가 다르고 청년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기초한 세분화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긴 시간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정책담당자나 국민들이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재**

●정리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 자연 더하기, 삶 올리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긍정(positive), 더욱(more), 나은(better), 부가가치(added value), 함께하는(works together), 떨어질 수 없는(can't be apart) 그리고 긴급함(urgent)  
이 모든 단어가 뜻하는 말 '더하기'

오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된 자연의 가치를 되짚어보기 위해 '자연 더하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자연을 잘 가꾸고 보전해야만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변화, 식량위기, 생물종의 다양성 파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1만여명이 넘는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대가 없이 공유한다. 제주를 풍성한 문화행사로 이에 화답한다. 이들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인류가 꿈꾸는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 ‘자연의 회복력’ 높이기 위해 세계 환경인, 제주에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환경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가 오는 9월 6일부터 열흘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WCC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생태계 관리 등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다. 지난 60년간 22차례 회의를 개최한 IUCN은 이번에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로 제주도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람사르습지·세계지질공원 등 4개의 타이틀을 보유한 세계적인 환경의 섬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번 WCC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

고히 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지역경제와 국내 관광산업, 환경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제적 가치는 무려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WCC의 주제는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이다. 생태학적 의미에서 회복력은 교란상태를 견디고 스스로 복원하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용력을 뜻한다. 빠르고 불확실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능력을 신장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부 주제는 첫째, 자연의 보전 및 가치평가 둘째, 자연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셋째, 경제의 녹색화 넷째, 자연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다섯째,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생태계 관리

등 다섯 가지로 정해졌다. 프로그램은 개·폐회식을 포함해 세계보전포럼, 회원총회, 세계리더스대화, 공식투어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복지, 녹색성장 등 21세기형 자연보전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선언문과 결의문·권고문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WCC 역사상 최초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20개의 발의안을 준비했다. 발의안은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황해의 지속 가능성과 보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제출된 발의안은 전체 투표로 채택해 사안에 따라 결의문이나 권고문으로 결정된다.

이번 WCC는 준비부터 폐막까지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된다. 총회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며,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총회’를 개최해 종이사용을 줄이는 한편, 전기버스·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운행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친환경 숙박업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발적 탄소상쇄기금도 조성할 것이다.

올해는 리우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되는, 지구 환경 논의에 있어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다. 성공적인 WCC 개최로 세계 각국에서 보다 나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



지난 2월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D-200 기념행사에서 이흥구 2012 WCC 조직위원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선일**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기자  
ysi@etnews.com

● 프로그램

#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총회 사상 최초 '세계리더스대화'

〈표〉 세계리더스대화 주제

	세부주제	기본질의
9월 7일	기후(Nature + Climate)	Can Nature save us?
9월 8일	식량(Nature + Food Security)	Can we feed the world sustainably?
9월 9일	경제(Nature + Development)	Green economy: myth or reality?
9월 10일	인간(Nature + People and Governance)	Can conservation tackle poverty?
9월 11일	생명(Nature + Life)	Saving nature, why bother?

지난 2009년 10월 제주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총회의 주관기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48년 창설된 연합체 형태의 환경 단체로 국가, 정부기관, NGO 등 1,224개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인 '레드리스트'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 모두 주목할 만하다. 그중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를 꼭 꼽으려면 '세계리더스대화'(World Leaders Dialogues)라고 할 수 있다. 세계리더스대화는 환경 분야의 세계적 지도자와 전문가, 국내외 저명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회 기간 중 매일(9월 7~11일, 17:00~18:30) 5개의 다른 주제로 자유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다.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럭 낙가자(Luc Gnacadja)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브라리오 페레아 드 수자 디아스(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 국제환경기구 수장과 바라트 자그데오(Bharrat Jagdeo) 가이아나 전 대통령, 리온포 킨장 도르지(Lyonpo Kinzang Dorji) 부탄 전 총리 등 세계적 환경 지도자들이 주요 패널로 대거 참석해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국제적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정유회사 쉘(Shell)의 북남미지역 회장 마빈 오둠(Marvin Odum)과 글로벌 농업·유전자 기업인 신젠타(Syngenta)의 CEO 마이클 맥(Michael Mack) 등 세계적 친환경 기업 대표들이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세션들은 총회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CCC) 탐라홀에서 진행된다. 총회 등록을 하면 현장세션 참여가 가능하며 지금도 등록 접수 중이다.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회의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주제 및 패널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자 혹은 전문가에 의해 선택된 질문은 적절하게 패널에게 전달된다. 5개 세션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현재 IUCN 홈페이지에는 5개 주제와 패널 소개, 사전 질의가 이뤄지고 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계리더스대화는 유엔 3대 환경협약 수장 등 환경 리더들이 모여 이들의 의견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격식 없는 참여형 토론이 가능한 자리다. 환경·발전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통찰력 있는 식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등 환경 분야의 현안에 대한 세계적 연구결과와 성과, 현장에서의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환경보전 정책 및 제도 수립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장이 될 것이다. **▶▶**

**김나경**

2012 WCC 조직위 프로그램개발팀 전문위원  
wcc2012@gmail.com



# 생명의 근원을 여행하라!

– 신비의 산림습지 제주 선흘곶자왈 동백동산

자연을 여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일지도 모른다. 자연에는 생명들이 깃들어 있고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여행이기에 그러하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영예를 얻은 제주도의 생태여행은 더욱 그러하겠다. 돌과 바람이 많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연을 이기기보다 더불어 순응하며, 당장의 이득보다 함께 존재하는 긴 시간의 길을 선택했던 섬사람들의 지혜로운 문화가 지역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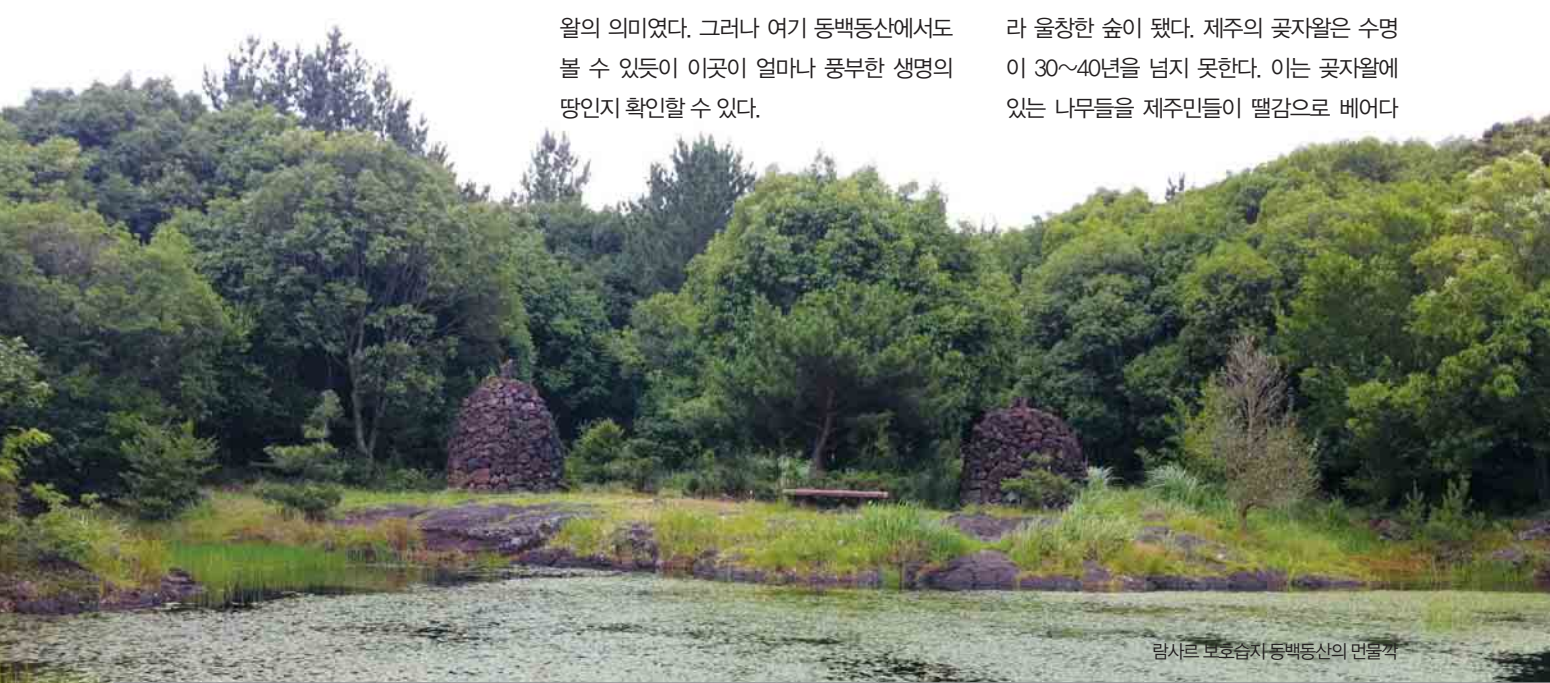
자연보전총회를 기점으로 제주의 생태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자연과 삶 그리고 예술을 더불어 여행하시라 권한다.

## 곶자왈, 돌무더기 쓸모없는 땅에서 생명의 숲으로 재탄생

제주의 자연환경은 크게 한라산, 오름, 하천, 곶자왈, 해변, 용암동굴 그리고 습지 이렇게 일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곶자왈은 불모지로 남아 있다가 최근야 그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이다. '돌무더기 쓸모없는 땅', 이것이 그동안 곶자왈의 의미였다. 그러나 여기 동백동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곳이 얼마나 풍부한 생명의 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동·서부 지역에는 속칭 '곶자왈'이라 불리는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제주어 사전에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곶자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속칭 '곶자왈 용암'이라고 하는 점성이 큰 아아 용암(aa lava, 표면이 거칠고 작은 가시들이 돋친 모양의 파편으로 덮인 용암)이 흐르다 쪼개지면서 거친 돌무더기 땅이 된 곳을 뜻한다. 두께가 5~10m인 용암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이 돌무더기 땅에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이 됐다. 제주의 곶자왈은 수명이 30~40년을 넘지 못한다. 이는 곶자왈에 있는 나무들을 제주민들이 땀감으로 베어다



림사르 보호습지 동백동산의 면물각

썩고, 썰감으로 나무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부터 맹아가 발달해 자라났기 때문이다.

제주 꽃자왈은 한경-안덕, 조천-함덕곶자왈이 대표적이다. 이들 꽃자왈은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모지로 인식돼 왔는데, 최근 이 지대에 대한 식물학적·지질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또한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천연 난대림 지역이어서 식물학적으로도 보존·연구 가치가 무궁무진하며, 투수성이 높아 지하수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꽃자왈에는 꼭 꽃자왈 용암지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파호이호이 용암(표면이 반들반들한 용암)지대가 암반을 이룬 위에 아아 용암지대가 이뤄지기도 한다. 사계절 내내 초록이 짙은 난대성 상록활엽수림으로 이뤄져 있다. 선홍지역의 동백동산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가 이미 빌레 용암지대와 용암동굴로 형성되고 난 위에 아아 용암지대인 돌무더기로 이뤄진 곳이다.

이곳의 주 식생은 동백나무가 많고, 예덕나무·조록나무·황칠나무·종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까마귀베개 등 난대성 상록수림이 전국 상록수 65종 중 31종이 서식하며, 사 람주나무·누리장나무 등도 많다. 숲의 바닥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자라고 백서향·자금유·백량근 등 식물 다양성도 매우 뛰어나다. 세로로 뻗어 서 있는 숲 속에 동물과 새들이 가로로 선을 그리며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 꽃자왈의 식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식생으로 난대성 식물의 북방한계식물과 한대성 식물의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곳이어서 식물 다양성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다. 제주도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던 시기에 몸을 숨겨주던 비밀의 용암동굴도 많다.

**동백이 많아 동백동산(제주도기념물 제10호)**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동쪽(산 12번지 외)에 있는 동백동산은 난대성 수종이 넓은 면적을 차지한 상록활엽수의 천연림으로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곳은 원래 동백나무가 많다 하여 '동백동산'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이 지역의 식생은 주로 구실잣밤나무·종가시나무·후박나무·빗죽이나무 등 난대성 수종이고, 나무 밑에는 새우난초·보춘화·사철란 등이 자라고 있다. 제주도에서 평지에 남아 있는 난대성 상록활엽수로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뿐 아니라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나 제주도의 중산간이 파괴되기 이전의 원식생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임상(林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동백동산의 숲 안은 물론 숲 주위에는 백서향나무·변산일엽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동백동산(선홍곶자왈)의 소유권은 마을 및 개인 등 사유지였으나, 2009년부터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해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산림청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가 도 교육청 및 개인 사유지다.

동백동산 안에는 곳곳에 습지가 형성돼 있고, 특히 '먼물깎'이라는 우물이 작지만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어 동백동산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곳 습지에는 환경부 보호종인 맹꽁이·물장군·순채·물부추 등이 자라며, 그



필자가 관광객들에게 동백동산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 제주 특산종인 비바리뱀도 살고 있다. 먼물깎은 마을에서 가장 멀리 있다 해서 붙은 이름으로 해석되며, 이 먼물깎을 중심으로 약 0.59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람사르 보호습지로 등록돼 있다. 환경부 보호 습지로도 지정돼 환경부에서는 매해 3회씩 습지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선흘리 마을 사람들과 여행지들로 하여금 습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자연의 가치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한 긴 작업이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앞서 시작된 환경대축제 기간 동안 동백동산을 끼고 있는 마을 선흘리에서는 '자연이 사람과 예술을 만날 때'라는 생태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선홍곶자왈을 여행할 때 선흘리 마을도 꼭 더불어 여행한다면 훨씬 깊은 생태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

**고제량**  
생태문화여행 기획자, 제주생태관광 대표  
jeryang@daum.net



# '31일간의 제주여행', 막은 올랐다



지난 8월 18일 제주도청 앞마당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기념 자전거 라이딩 개막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곤 했다. 제주엔 그간 여러 가지 경사가 있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라는 유례없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 이제 제주는 국내외에서 날아온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 달간 잔치를 마련했다. '31일간의 제주여행'은 다양한 메뉴만큼이나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주 환경대축제 '31일간의 제주여행'은 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목원,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제주 전역 11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크게 특별프로그램과 상설프로그램, 가족·학생프로그램으로 나뉘어 200여 가지 넘는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매 주말마다 한라산목원에서는 '함께 사는 지구 만들기 숲속 영화관'이 운영돼 환경영화제 수상작 등을 상영하고, 아름다운 제주 해안과 올레길 트레킹을 맛볼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페스티벌'도 매 주말 열린다.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총 11회에 걸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명사와 함께 하는 강연 콘서트'가 마련된다.

지난 8월 18일엔 천지연 광장에서 '별빛과 함께 하는 불꽃향연 페스티벌'이 열려 총회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또한 8월 24~26일에는 '한국 전통연회(민속놀이)한마당'이, 25~26일에는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마련돼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었다. 오는 9월 1~2일에는 천지연광장에서 '제주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스페이스 공감'이 무대에 오르고, 9월 7~9일엔 돌문화공원에서 '에코힐링 페스티벌'이 열려 자연과 인간의 치유를 주제로 한 음악이 흐를 예정이다. 또 9월 6~15일에는 '세계유기농한식축제'가 총회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전통 한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국의 음식들도 함께 등장해 오감을 만족시킬 것이다.

가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WCC와 함께하는 생태관광 촬영대회',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 '지구사랑 환경골든벨', '아름다운 나눔장터 에코 베품시장', 'WCC 기념 모험항공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총회 참석자들에게 개방된다.

2012 제주WCC 추진기획단 김양보 팀장은 "성공적인 WCC 개최를 위해 참가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제주의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면서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감동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셀 수 없이 풍성한 각종 전시와 공연, 체험 중심의 즐길거리가 가득한 제주 환경대축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제한적인 기간, 공간, 대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 되는 지구촌 잔치가 벌어졌다. 이전 우리가 제주의 초대에 응할 차례다. ■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정보②

# 1만8천여 신들이 살았던 땅, 제주가 들려주는 이야기

제주의 날씨는 다른 지방에 비해 변덕스럽다. 아침에 비가 오더니 이내 곧 맑아진다. 하지만 금방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거칠어지곤 한다. 특히 한라산 주변은 더욱 그렇다. 제주도에서 골프를 한 번 이상 쳐본 사람은 대부분 실감하게 된다. 바람의 방향도 산간과 해변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신들만이 안다. 하여가만히 눈을 감고 태곳적 신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들의 놀이터였기 때문이지”라는 대답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아득하게 들려온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제주도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말 그대로 ‘신화 놀자’의 고장이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신들의 이야기와 흔적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일례로 신화의 내용이 담긴 굿 제의(祭儀)가 각 지역별로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록신화로 최고라고 한다면 제주 신화는 세계 최고의 구비전승 신화인 셈이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설문대할망제’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굿’만 하더라도 그렇다. 때문에 학자들은 “제주 신화는 비단 제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충분한 자격과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제주도 지하에서 수천수만년 동안 씨줄날

줄 얽히면서 온갖 신비로운 이야기를 뱉어내는 동굴 또한 이에 다름 아니다. 만장굴과 김녕사굴 이야기, 얼마 전 발견된 용천동굴만 하더라도 신비로운 설화와 신화가 잔뜩 담겨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주에는 1만8천여 신이 존재했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구비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제주의 창세 신화가 학자들의 연구와 관심으로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창세 신화는 무당들의 본풀이, 즉 서사무가(敍事巫歌)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신화 속에 고유한 등장인물이 있고 그 등장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줄거리로 갖춰져 있다. 천지왕본풀이, 초경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등 여러 무속의식을 통해 흥미로운 줄거리로 구연(口演)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신과 지상의 여신이 결합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며 또 다른 신들을 잉태시키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천지혼합에서 천지개벽, 천지인(天地人)의 변화 속에 구체적 만물형상들이 만들어진다.

제주 신화 가운데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이 복수로 생겨나 이를 조정하는 과정과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삼형제가 선의 경쟁을 통해 지분을 나누는 내용 등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학자들의 흥미를 당기게 한다. 탐라 개국 신화



지난 5월 15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설문대할망제’에서 여성 제관들이 제주의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인 ‘설문대할망(할머니)’을 기리고 있다.

가 된 이들 삼형제 이야기는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영주지’ 등의 문헌에도 기록돼 있다. 고, 양, 부 삼형제가 태어난 삼성혈 외에도 옥황상제가 타고 다녔던 하늘의 백록에 얽힌 백록담, 영실기암, 제주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과 연관된 영장매코지와 관탈섬, 상상의 나라 벽랑공주와 국제결혼을 맺었던 혼인지(婚姻池), 돌문화공원 등에서도 신비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 신화와 설화는 대부분 ‘잉태’와 ‘탄생’이라는 거룩함 속에 세상 질서와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시와 소설, 애니메이션 등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보고(寶庫)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 제주의 다양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김문 기자의 소설 『판타지 제주신화』를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에서 지역별 전설을 찾아볼 수 있다.

김문  
서울신문 편집국 선임기자  
km@seoul.co.kr



● 인터뷰

김종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 “제주 총회, 글로벌 환경 리더십 확보할 절호의 기회”



김종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2006년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했다. 이어 2008년엔 국내 지방정부로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회원이 됐다. 당초 2012년 총회 개최지는 멕시코 칸쿤이 유력했으나 총회 개최를 열망하는 130만 제주인의 서명을 받아든 IUCN 위원들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회지원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조직위가 구성되는 등 법정부적인 지원사격에 힘입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총회 역사상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앞두고 우문(愚問) 같지만, 왜 총회를 유치해야 했나?

세계자연보전총회는 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환경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각종 환경협약도 탄생했다.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등의 시초가 바로 이 총회다. 각국 정부가 자연보전정책을 수립할 때도 총회에서 제시한 과학적 지식과 기반을 활용한다. 그러한 국제환경 질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선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했지만 이젠 G20, 핵안보정

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총회를 유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력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밝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 회원들이 국가, 지방정부, NGO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정부와 비정부 대표가 동일한 목소리와 권리, 제안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총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어느 기구에도 없다. 아주 민주적이다. IUCN에 소속된 180개국 1만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환경 관련 법, 교육, 정책 등 분야에 포진해 있으면서 실질적 지식과 정보, 각종 기법과 사례를 자연보전을 위해 순수하게 내놓는다.

### 굉장히 중요한 행사임에도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일정이 있고 여수박람회, 런던올림픽 같은 행사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흩어진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도 기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 자연보전은 자신과 후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건강을 유

지해주고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을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여기다 보니 인류가 심각한 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열대야나 폭염, 폭설이나 폭우가 왜 나타나는가. 자연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총회 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말씀 같다.**

‘자연의 회복력’이란 주제를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인간에게 자연적 재앙이 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왔는데 그런 능력이 자꾸 떨어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연과 잘 소통해야 한다. 건강한 자연과 환경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총회의 역할이자 핵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면?**

인간이 개발을 위해 해온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동들이 산과 숲, 습지 같은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이 머무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했다.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환경오염은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했다. 멸종되는 종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기능이 파괴된 것이다. 또 전 세계 70억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식량위기’와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물을 이용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관점도 전달하려 한다. 끝으로 소득창출을 위해 추구했던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녹색성장’에 대한 것도 있다. 환경 파괴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국제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정부가 달라지고 개인과 기업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도 있는데?**

DMZ, 제주 해녀, 백두대간 보전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의제로 제시했다. 일례로 DMZ에는 국제적 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한국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많아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 국제적 차원의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해 발의했다. 워크숍, 지식 카페,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 손쉽게 참여를 이끌어 한다.

**알면 알수록 이번 총회엔 최초가 많더라.**

64년 IUCN 역사 중 동북아에서 열리는 첫 총회다. 주최국이 발의안을 20개나 제출한 것도 최초고, 수도나 대도시가 아닌 섬에서 열리는 것도 최초다. 제주가 아름다운 자연, 좋은 인프라를 갖추기도 했지만 무척 열의를 가진 덕분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제주는 환경보물섬으로서 세계적 위상을 얻게 될 것이다. 총회가 생중계되면 전 세계 70억 인구의 눈과 귀가 제주를 향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제주가 세계 환경허브가 되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IUCN은 주최국 자금으로 4년마다 회의를 개최한 수준에서 그쳤는데, 우리가 주최지를 세계 환경허브로 지정하면 행사를 치를수록 환경허브가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IUCN은 그럴 권한이 없으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환경허브의 개념, 자격조건 규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 지켜볼 부분이다.

**말씀하셨듯 자연을 보전하면서 총회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스마트총회’를 표방한다.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스마



지난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사전행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이 열렸다.

트기기로 볼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인 만큼 이 부분을 잘 접목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총회, 효율적인 총회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싶다. 또 지금 회의장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 지붕엔 태양열시설을 갖추고 조명기기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꿨다. 회의장 수송도 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로 이뤄지고 IUCN 사무국엔 전기승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제공한다.

**총회가 눈앞이다. 다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정부, NGO,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식견과 지식, 통찰력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장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의 정책을 나누고 국제사회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각계의 폭넓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 이번 총회로 우리는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발휘하고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한마디

# 생태보전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 합의 이루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일 기록적 폭염이 나라를 휩쓸었지만 이보다 더 뜨거운 런던 올림픽 열기가 이를 식혀줬다. 사실 올림픽은 국제적 운동경기 행사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이상이다. 거의 모든 국제 행사들을 쉽게 설명할 때 언론에서 '무슨무슨 올림픽'이라고들 이름 붙이는 데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라는 회의를 처음 언론에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행사를 '자연 올림픽', '환경 올림픽'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보도를 여기저기서 봤다. 그런데 노벨상 못 탄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을 '어떤 분야의 노벨상'이라 과장해서 말하듯 '올림픽'이라 붙은 행사치고 실제로 그리 중요한 행사는 많이 보

못했다. 처음 이 행사의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 생각은 더 굳어졌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행사에 익숙한 나에게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이 잔뜩 나열돼 있고 정작 환경에 관한 행사 프로그램 자체는 산만한 이 총회가 그리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개인적 이유로 인해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총회와 관련돼 '지식 카페'의 한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 연구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점이고, 두 번째는 내 아이도 학교에서 수행한 과학 프로그램으로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총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학회에 가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이야 내가 항상 해야 하는 업 중 하나지만, NGO나 중·고등학생들까지 자신들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국제적 행사는 드물다. 더욱이 생태와 자연을 보전하자는 주제의 모임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인류가 직면한 환경파괴의 문제는 이전에 인간이 맞이했던 문제와는 시간적·공간적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류의 경제개발이 낳은

파괴와 오염으로 야기된 생물다양성의 파괴 속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운동가들의 슬로건에 등장하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보고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

생태보전은 매우 다층적인 문제다. 단순히 과학자나 정책입안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가 믿듯이 경제개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 해결책도 결국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자나 공학자의 기술적 해결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환경교육, 적절한 법령과 경제적 유인의 도입, 선·후진국 사이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같이 산만해 보이는 모임과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이다.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이 국가의 경제적 성취와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주듯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참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보전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 합의가 이뤄질 길 기대해 본다. ■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에서 탐방객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hj\_kang@yonsei.ac.kr



# 創職

## 반려동물사진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촬영...  
 동물만 단독으로 또는 주인과 함께

1인 가구와 같은 초핵가족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는 물론 옷, 전용 목욕용품부터 애견유치원과 미용실, 호텔이 생기는 등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애견인, 애묘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동호회를 결성하는 등 자연스럽게 애견(애묘)문화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트렌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사진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이들이 있다.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 '키즈 펫 스토리'의 고희정(28세), 임한빛(32세) 대표가 그 주인공.

사진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 고민에 빠졌다. 학과 친구들 중 일부만이 광고계로 진출했고, 유학을 가거나 개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광고계로 들어가기에는 경쟁이 치열했고, 일반 스튜디오는 따분하게 여겨졌다. 유학갈 형편도 아니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으나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유년시절부터 강아지를 길렀어요.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게 제 나름의 애정표현이었죠.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에게서 뜨거운 반응이 왔어요. '애견과 함께 사진을 찍어 간직하고 싶다, 오래 기른 동물의 영정사진을 찍고 싶다'는 등 댓글문의가 다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일을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은 의기투합해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반려동물사진사로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촬영한다. 개인 고객은 강아지·고양이·이구아나·새·뱀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데려온다. 동물만 단독으로 찍거나 주인과 함께 찍기도 한다. 아기 돌사진을 찍듯 반려동물의 100일, 200일을 챙기는 고객부터 자식 대신 기르는 동물과 가족사진을 찍으려는 고객까지 사연도 제각각이다. 기업의 경우 반려동물용 제품·카탈로그 등에 쓰이는 사진, 업체 홍보를 위한 사진 등이 주를 이룬다.

반려동물사진사는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과 더불어 동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촬영기술만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강아지는 건종의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야 해요. 생김이나 모색, 체형 등을 잘 살려서 촬영해야 합니다. 애묘인들은 고양이의 곡선을 잘 표현해줄기를 바라죠. 고양이는 움직임에 따라 몸의 곡선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처음 스튜디오를 오픈했을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베이비촬영이나 웨딩촬영보다 훨씬 까다로

운 작업임에도 합리적인 요금을 받기가 어려워 마음 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조사하며 우리나라에도 곧 애견문화·산업을 확대될 것이라 믿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행히 애견산업이 성장하는 추세라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 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어요. 사진으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를 졸업한 저희를 의아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광고 분야로 진출하거나 순수작가로 남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으니까요."

사회트렌드를 읽는 눈, 개인의 능력과 흥미, 끈기와 노력,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며 반려동물사진사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다. 일자리 부족에 맞서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낸 이 청년들이 이 시대 진정한 '용감한 녀석들'이 아닐까. **김민형**

● 김민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mpurple3001@daum.net



『키즈 펫 스토리』의 공동대표 고희정 씨 ▶

1952년 생  
이화여대 사회학과,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8년 ~ 19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1년 ~ 2004년 한나라당 여성국장  
2006년 ~ 2007년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2008년 ~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 2009년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2008년 ~ 2009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8년 ~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08년 ~ 201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0년 ~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1년 9월~현재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 김금래



# “게임중독 아이 치유했을 때 학부모와 같이 울었다”

## 9월이면 취임 1년이 되신다.

취임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섯다 운제) 실시를 둘러싼 논란, 학교폭력, 아동대상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안타깝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키우고 보호하고 보듬는 것들이다. 따뜻한 일을 하는 부처라는 것을 느꼈고, 현장에서 감동도 많이 받았다. 다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시범사업 정도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 30년 이상 여성운동을 해오셨다.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여성 문제에 눈을 뜬 것 같다. 솔직히 말해 같이 서클활동 했던 남학생들은 대기업 등에 척척 들어가는데 제게는 원서 한 장 안 주더라. 그 때만 해도 여성은 2~3년 임시로 일하다가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비서직 등은 뽑아도 정규 업무 쪽으로는 기회조차 없었다. ‘다 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것이 무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성 문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됐다. 그때부터 여성운동을 하게 됐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당시와 비교해볼 때 여성

## 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나?

물론 많이 발전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게 그토록 심했던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없어진 것이 정말 기적과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령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힘들고, 출산과 육아와 가사부담은 아직도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만 돼 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이 같이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어서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고, 경력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고위직에 여성이 없어지고…. 이런 구조는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다.

## 여성 문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육아휴직과 정시퇴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눠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빨리 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에도 전파하고 있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있나?

2008년부터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실 설치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57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신청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증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조달청·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여성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또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가족가치 확산 등을 통해 '행복한 사회'로 가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 시에도 가점을 받는 등 35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우수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증 기업들이 우수인력 유치,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신입사원 비율은 40%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우리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왔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전국 45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사이버 멘토링'도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임원 및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해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직장에서 커가려면 무엇보다 CEO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 부에서도 CEO

대상 가족친화포럼 등의 활동을 해오곤 있지만, CEO가 여성을 인정하고 임신·출산에 너그러운 직장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관리자나 CEO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여성들이 좀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관께서는 출산·육아로 인해 일과 가정을 놓고 고민하는 후배 여성들에게 평소 어떤 조언을 하나.**

편하게 말하자면 '가능하면 최대한 버티라'라고 얘기한다. 하하. 애 키우는 몇 년간은 경력관리기간으로 생각하고 돈을 모으려 하지 말라는 거다. "나중에 경력직이나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다. 대체인력 쓰고 친정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야 그 다음이 있지, 고생만 하고 경제적으로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 직장을 그만뒀 버리면 나중에는 지금만 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충고한다. 지나 보니 애들은 금방 크더라(웃음).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폐해가 심각하다. 이 과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파악해 중독 원인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해물에 대해서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전문적 상담·치료 모델도 개발·보급하려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부모나 교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UN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수상을 축하드린다.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점이 UN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은데, 수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6월 25일 우리 청소년정책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UN공공행정상을 수상했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더 기쁘다. 전 세계 1,300여 곳에서 공모했으니 대단한 것 아닌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또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펼치고, 청소년통합안전망(CYS-NET)을 확대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지원체계를 만들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 점도 주요했다고 본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형성된 청소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청소년폭력·게임중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삼아 더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저 자신도 '청소년 지킴이'로서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관께서는 청소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놀면 좋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듣고 보니 정말 그들이 갈 데가 없더라. 기껏 공원 정도이지 않나. 전국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미흡하게 사실이다. 이 문화의 집이 조속히 확충돼 청소년들이 동네 사랑방처럼 모여 책도 읽고 탁구도 치면서 놀기도 하는, 청소년들만의 자유로운 공간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

우선 '포레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청소년기에는 고

민을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는다. 같은 학급에서 포레상담 훈련을 받은 아이가 있으면 누가 왕따가 되는지 살펴 중간자 역할도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말벗이 돼주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중학교를 포함해 3,3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 포레상담자는 1만4천여명, 지도교사는 5천여명에 이른다. 연말까지 포레상담자를 1만5천명으로, 지도자는 6천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움에 노출된 청소년이 손쉽게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익명성'과 '접근성'을 담보하는 사이버 상담과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했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족관계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교육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는 장시간 근로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서로 마주칠 틈 없이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많은 대화와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을 확산하고 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해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갈등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방과 후 방치되거나 비행·가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옳은 지적이다. 티 없이 자라나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9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의료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92개소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교과부와 함께 학업중단 위

기청소년이 2주간 상담 등 숙려기간을 가져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24시간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1388), 문자(#1388), 사이버 상담 등 선제적 대응체계도 만들었다. 10월 중에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개소해 행동장애 등을 보이는 고위기 청소년들의 치료와 보호, 교육과 자립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장관께서 가슴속에 두고 있는 인생 멘토는 누구인가?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동지와 선배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들과 모셨던 회장님 등을 모델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멘토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아버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한 여성 뒤에는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저 역시 그렇다. 아버지는 저를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너는)넘버 원이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항상 북돋아 주셨다. 또 예를 들어 수업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책을 더 읽어라"라고 하시며 "네가 잘되면 수혜는 최고 전문가의 것을 사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그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과 그들의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으로 두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던 어머니께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인터넷 레스큐 스쿨(청소년 인터넷중독 기숙치료학교)에 보냈는데, 참여 후 달라진 모습에 "정부가 우리 아이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줬다. 국가에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저도 같이 울었다. 인터넷게임을 차단해 밖으로 나와 뛰어놀게 하고 선생님도 상담도 해주는 등 다양한 대안활동을 체험하자 아이들이 '아! 인터넷게임이 없어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변한다는 거다. 지금은 레스큐 스쿨을 방학에만 열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 여성으로 성공하신 장관께서도 흑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있지 않었나?

있었다. 입덧할 때 가장 힘들었다. 그때 '조물주가 남자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었다. 하하. 그때 외에는 자존심



지난 4월 2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늘푸른 자립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 오기 때문이라도 그런 마음은 없었다. 내가 갖고 태어난 성(性)을 사랑하려 했고, 여성이어서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다. 딸이어서 아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친정에도 시택과 똑같이 하려 애를 썼다.

### 좌우명이나 신념은 무엇인가?

충용, 즉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물 흐르듯이 살려 했다. 여성운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투사 이미지를 갖고 보는데, 이제까지 길이 열리는 대로 지금의 일에 충실하면서 순리에 맞춰 살아 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다.

###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관련 업무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잘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또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가족가치 확산 등을 통해 '행복한 사회'로 가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 아울러 계획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서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안타깝다. 레스큐 스쿨을 상설화하고, 태부족인 가출청소년 쉼터, 성폭력 여성들을 위한 시설 등도 늘려야 한다.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좋겠다.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도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박영재

2012년 국립국악원이 여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국악  콘서트  
 차 이야기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2  
 GUGAK CONCERT  
 WITH TEA&STORY  
 DADAM

2012. 9-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주최  국립국악원  
 협찬 The history of  오가다

출연 국립국악원 정악단·민속악단·  
 무용단·창작악단 외 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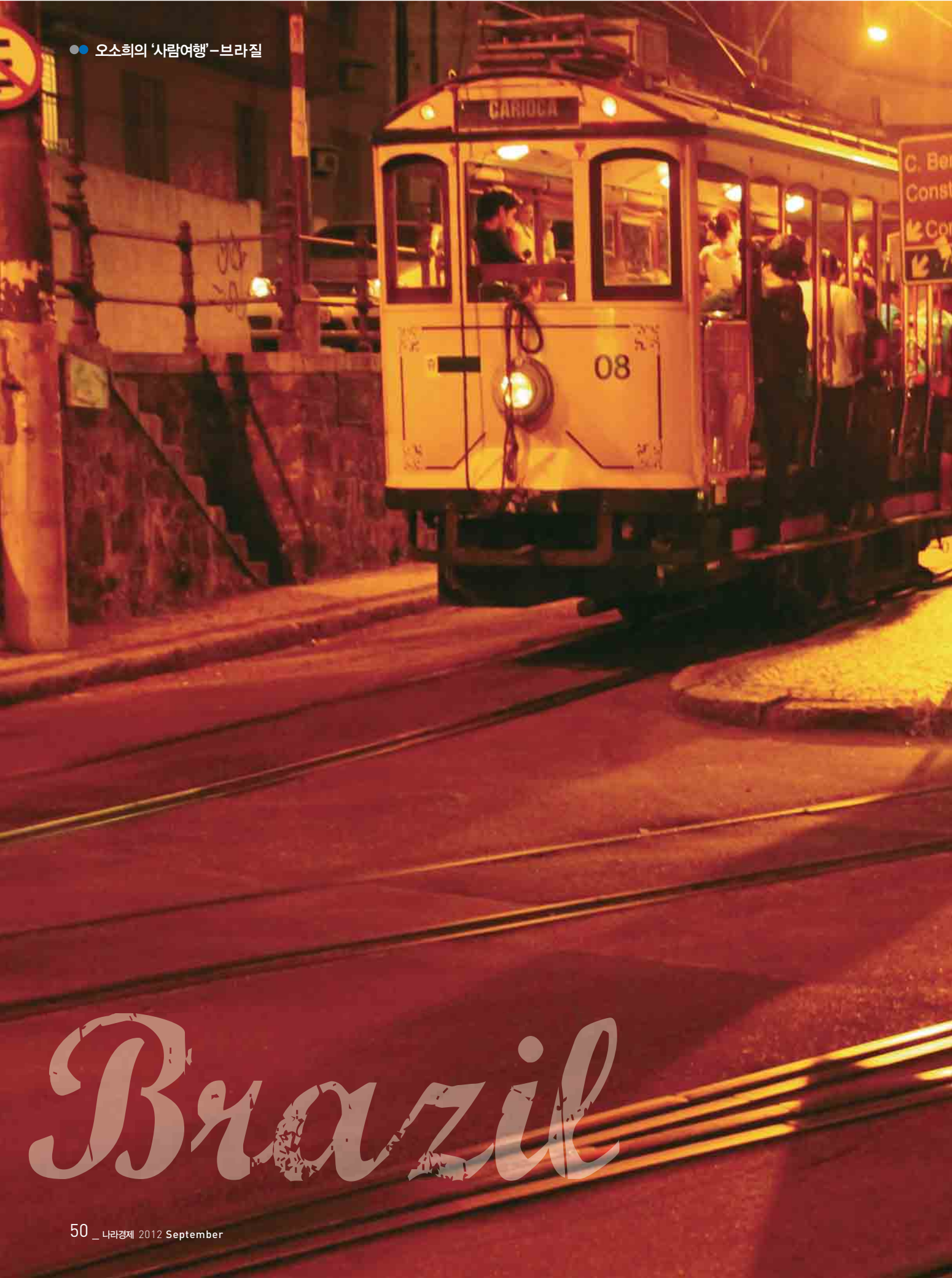
관람료 10,000원

할인 삼삼오오석 (30%할인)  
 3인석 21,000원, 5인석 35,000원

뮤음좌석 (50%할인)  
 3회 관람권 15,000원  
 7회 관람권 35,000원



다담지기 유은  
 (가수·방송인)



# Brazil



## 산타테레사의 트램 타고 환희 속을 질주하기

“엄마, 우리 또 산타테레사가?”

그러고 보니, 어제도 아이는 같은 질문을 했다. 브라질의 리우에 있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산타테레사에 갔다. 오, 산타테레사! 나는 널 사랑했지.

산타테레사는 샌프란시스코처럼 ‘트램’이 마스코트인 리우의 언덕 동네다. 한때는 부촌이었으나 지금은 부자들이 평지와 해변을 찾아 내려갔고 그들이 살던 고풍스런 옛 저택들, 그 사이사이 놓인 돌계단과 자갈 박힌 골목들이 고스란히 남아 젊은 예술가들을 유혹하는 아지트가 되었다. 구석구석 젊은 예술가들이 남겨놓은 벽화와 그래피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이다.

맨 처음 트램을 타러 갔을 때, 나는 그다지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탈것을 좋아하는 열 살 아들이 취향에 맞는 장소일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상을 뒤엎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는 트램역을 찾아갔더니, 리우의 고층빌딩들로부터 고작 한 블록 벗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숨어 있던 작은 공원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풀들이 웃자랐고 덤불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흘러나왔다. 낡고 고즈넉한 역사였다.

한 량짜리 트램은 마치 옛 서커스단의 기차처럼 양증맞은 외양으로 등장했다. 승객들은 먼저 좌석을 채웠다. 남은 승객들은 트램 기둥을 붙잡고 매달렸다. 당연히 정원초과였다. 해질 녘, 하루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좁은 트램에 어깨를 바투 붙이고 모여 키득대고 떠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노래를 했다. 사람들이 낮게 웃었다. 차안의 노란 전구가 켜졌다. 밖으로는 오랜 지빛 노을이 조금씩 진해졌다. 화목했다.

‘화목하다’는 단어는 어느새 브라질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01

01 산타테레사를 표현한 공예품들  
02 트램에 매달려 즐거워하는 승객  
03 하룻길 트램을 탄 소년 04 산타 테레사의 북카페 풍경



02

03



다 절로 떠오르는 단어가 되었다. 우리는 화목하다는 것을 가정에만 적용 가능한 어휘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화목한 사회가 화목한 가정을 낳을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곁을 공유하며, 소소한 기쁨을 삶의 가운데 토막에 놓는 하루. 그 단순한 하루의 리듬을 '돈'보다 중시하는 사회에서만.

브라질인들의 자유로운 천성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살아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원하면 웃을 수 있다네. 언제라도 원하면 매일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다네. 어리석은 사람아, 웃음도 노을도 공짜라네. 삼척동자도 아는 그 단순한 진리를 소중하게 대접해야 한다네.

“땡땡!” 동화 속 기차와 같은 종소리를 울리며 트램이 출발했다. 1896년 전기로 달리기 시작한 낡은 트램답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처럼 비틀비틀 출발했지만, 역사를 벗어나자마자 반전이였다. 곧장 18세기에 건설된 높이 45m의 고가 철로를 지나는 게 아닌가.

“헉! 뭐야, 이진?”

저 아래 개미떼처럼 지나가는 차량과 인파가 보이는데, 창문

도 출입문도 없이 땡 땡 트램 안팎으로는 승객들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안전장치 같은 건 없다. 가드레일도 없고 철조망도 없다. 떨어지면 끝이다. 브라질에선 트램마저도 상당히 브라질스럽구나! 다행히 아이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발만 트램 안으로 들인 채 죽을 등 살 등 기등을 움켜잡았다.

아슬아슬한 고가를 지나자 주춧가였다. 고요한 주춧가이니 이제 트램이 안전하고 얌전하게 달리겠지. 그러나 또 반전! 좁은 골목에서 트램은 도리어 브라질식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저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트램과 산타테레사의 트램을 '개'에 비교하자면 이런 식이다. 샌프란시스코 개는 좋은 사료를 먹고 보살핌을 잘 받아 털이 반지르르하다. 이 개는 달릴 때 고급 가죽끈으로 이끄는 주인의 정련된 손길을 따라 우아하게 워킹한다. 산타테레사의 개는 질 낮은 사료를 먹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먼지덩어리 같은 털을 지녔다. 목에 비닐끈을 맨 채 대부분 집 안에 방치된다. 이 개가 주인의 손에서 마침내 탈출하여 환희 속에 거리를 질주하는 모양새, 산타테레사의 트램은 꼭 이렇게 달린다.



04

하지만 브라질인들은 역시 다르다. 기둥을 꼭 붙들고 매달려도 시원찮은 이 판국에 재미를 찾아 일부러 기둥에서 팔다리를 하나씩 떼낸다. “휘익!” 휘파람을 불고 “우후!” 소리 지르며 떼어낸 팔다리를 흔든다. 즐거운 비명이 트램 안에 가득 찬다. 자전거 한 대에 말쑥꾸러기 소년들 여럿이 올라탄 바로 그 분위기. 내가 어릴 적에도 자전거 한 대에 꽤나 여럿이 올라탔었지. 소녀들과 인형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소년들과 거칠게 노는 것도 좋아했었지.

“우후~!!!!!”

내가 늑대처럼 외치며 잡은 손 하나를 놓았다. 피를 속일쑤냐. 자리에 앉은 중빈도 “우후~!” 따라서 울부짖었다. 옆 남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한 짝 벗어 바깥으로 늘어뜨린다. 슬리퍼가 레일 가장자리를 따다다다다 긁는다. 어릴 때 한 자락했던 어른 장난꾸러기들이 죄다 모였구나. 이 외중에 한 손으로만 난간을 붙잡고 선 남 녀가 남은 손으로 서로를 애무하며 키스한다. 나는 키스를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땡 뚫린다. 브라질식 난장이로고!

트램은 둥근 돌들이 촘촘히 박힌 골목을 질주했다. 노랗다 못해 주황색을 띠는 수은등 불빛 아래, 바닥의 돌들은 반짝반짝 세월에 닳아서 등글었다. 이 길은 한때 부자들의 마차가 다녔던 길이다. 자동차가 지나기에는 좁고 불편해 버림받은 길.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도 트램이 달린다. 자동차가 없는 가난한 젊은 보헤미안들이 올라와 예술을 펼친다. 흰 담벼락에 하늘색 말을 탄 갈색 누드의 브라질 여인이 그려져 있다. 트램을 탄 브라질 축구 선수단 벽화도 웃음을 자아낸다. 갤러리에는 마티스풍의 시원한 그림들이 걸려 있다. 뽁뽁 지나는 바와 레스토랑마다 사람들로 왁자하다. 잠깐씩 설 때마다 사람들이 뛰어내린다. 혹은 달리는 트램을 향해 달려와 들러붙듯 올라탄다. 전기는 잇을 만 하면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온다. 그때마다 우르릉쿵쿵 전차의 엔진이 재부팅된다. 이 어수선한 실내에서 차장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묘기하듯 똑바로 서서 요금을 받는다.

내 곁에 매달린 잘생긴 청년이 연애를 걸 듯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묻는다.

“혼자 왔니?”

아이고, 여기 수은등 조명발이 좋긴 좋은 모양이구먼.

“아니, 아들과 왔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중빈, 내리자!”

우리는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두 개를 사서 껍질을 벗겨 먹으며 산타테레사를 걸었다. 구석구석 아이스크림 핏물 빠짐없이 걸었다. 코너의 선술집에서 동네 남자들이 축구시합을 보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브라질 남자들은 축구를 본다. 축구광 중빈 때문에 그곳도 잠시 기웃거렸다. 골동품 같은 스페인풍 집과 집 사이, 좁다랗게 벌어진 틈으로 저 멀리 숨 막히게 아름다운 리우의 밤바다 풍경이 스며들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밤바다 위로 새빨간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다.

“저렇게 크고 붉은 달은 처음이야!”

우리는 입가에 묻은 오렌지즙을 닦으며, 또 하나의 오렌지 같은 보름달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밤, 거리의 모든 수은등이 실은 보름달만 같았다. 우리는 ‘달 과수원’을 걷는 사람들처럼 늦도록 달들이 주렁주렁 열린 밤길을 걸었다. **14**



오소희 여행작가

endofpacific@naver.com

‘사람’ 여행가. 세상의 변방을 거닐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저서로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 『사랑바보』 등이 있다.

# 경제 기초체력 떨어진 선진국 국채시장에선 훨훨 나는 이유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글로벌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국채 수익률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국채는 지난해 8월 S&P의 70년래 최초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을 정도로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또한 유럽 재정위기의 부담 속에서도 역대 상대적 경제력 우위라는 조건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기초체력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국채시장의 강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선진국 국채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자산 유동성, 환율 리스크 등이 안전자산 기준으로 부상

IMF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기준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설명됐다면 최근에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안전자산 여부를 결정짓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부도 가능성에 대한 척도인 신용등급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절대적 조건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부도위험 이외에도 해당국 경제의 상대적 견고성, 자산의 유동성, 인플레이 및 환율 리스크 등 다양한 조건들이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높은 국가채무 비중과 최근의 신용등급 강등 등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채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기준에 대한 투자자 인식의 변화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 IMF가 분류하고 있는 글로벌 안전자산은 약 74조달러 규모로 이 중 약 52%는 OECD 국가 발행 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화 증권(구조화 금융의 결과로 출현한 금융상품으로, 일반채권이나 주식을 구조설계를 통해 변형, 합성 및 유동화시킨 증권) 및 우량 회사채 등 민간 부문 자산이 약 35%, 금 등 기타 자산이 나머지 12%를 차지한다. 특히 안전자산



지난 6월 20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내 경기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2,670억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또 한번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나 모기지채 등을 사들이고 단기채를 팔아 장기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 수단이다.

으로서 선진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위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미국발 신용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안전자산, 미국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 구조화 증권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금융위기 이전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던 MBS 등 민간 부문의 자산유동화 증권들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폭넓은 수요층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이들 자산이 대거 부도 사태를 맞이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안전자산의 주요 매입처인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용위기 이후에도 선진국 국채 매입 위주의 외환보유고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안전자산 감소가 선진국 쓸림현상 낚아

선진국 국채수요와 더불어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은행, 중앙은행 및 연기금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수요주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요 국부펀드의 안전자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안전자산 수요증가 추세는 신흥국 중심의 외환보유고 확대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돼왔다. 최근에는 일련의 재정·금융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디레버리징 추세와 더불어 민간 부문

의 안전자산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안전자산은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 국가 발행 채권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용등급의 변화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크게 줄었다.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의 약 68%가 AAA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현재 약 52% 국가만이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5~2007년 사이 발행됐던 미국 MBS의 63%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특히 이 중 52% 이상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되면서 약 6조달러 규모의 안전자산이 사라지게 됐다. 재정위기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 채권을 합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기반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현재 안전자산 수요는 선진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확대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수급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이러한 최근 선진국 국채 강세 현상은 해당 자산의 가치평가가 경제여건이 아닌 수급 쓸림현상에 기인하고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기반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안전자산 품귀 현상으로 인해 현재 안전자산 수요는 미국, 독일, 영국 등으로 몰리는 쓸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부 국가의 국채 또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호주, 노르웨이 등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확대 또한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수급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선진국 국채 강세 현상은 해당 자산의 가치평가가 경제여건이 아닌 수급 쓸림현상에 기인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버블생성에 따른 위험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4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글로벌 안전자산 버블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글로벌 안전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hanskim@kcmi.re.kr

# 경제민주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현 여당 대선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과 실세 위원 간에 '경제민주화'란 용어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 솔직히 필자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전공이 재무학으로 워낙 협소한 분야다 보니 필자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 논문검색기에 'economic democratization'과 'economic democracy'란 단어를 넣었더니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구글 검색창에 동일한 단어를 입력하니 전자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영자 신문의 최근 기사만 올라왔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활동 중인데 주로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를 인용하고 있다.

몇몇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어디선가 들어봤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만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혹여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필자만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다가 안도했다.

##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vs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정의에 따르면 'economic democracy'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주로부터 노동자, 수요자, 공급자 등의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경제적 철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대립되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일컫는 것 같다. 과연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각론을 읽어보니 독과점 폐해 방지, 소비자 권의 보호 등에서 심지어는 제국주의에 따른 수탈적 식민지 정책의 폐해 등 뭔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의와 각론적 해석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산만해서

아무래도 분석의 정치성(precision)과 일관성에 초점을 두는 경제학자들의 입맛에는 불편한 정의였다. 색인을 보니 학술 논문은 단 한 개도 없고 주류 경제학자의 이름도 없다. 대부분이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저술한 책들로 학술서적보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판단이 들어 있는 거대담론의 정의라는 느낌이 들었다.

필자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분배 개선을 일컫는 것으로 착각했다. 물론 상기한 위키피디아의 정의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불평등과 비도덕성을 망라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필자는 보다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하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이들과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분배 정의에 가까운 것 같다. 이를 한국판 경제민주화의 정의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분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후생경제학의 제1원칙과 제2원칙에 따르면,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고 반대로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라면 이를 지지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자원배분을 개선(Pareto improvement)할 수 없는, 즉 파레토 효율을 만족하는 자원배분들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 집합을 'core'라고 한다. 문제는 이 중 어느 점이 최적이나는 것에 대해선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어떤 면에서 최적이나는 질문을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 어느 점이 균형이 되는가는 참가자들의 상대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고 경제학이 분배 문제에 완전히 침묵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게임이론을 토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학에 윤리

(ethics)까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론들이 수학적으로 공리(axiom)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리라는 게 모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가정한 공리가 과연 얼마만큼 보편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핵심 경제 분야로 부상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경제 문제에 경제학자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틀에서 자유로운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철학자들이 이 논의에 보다 과감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경제학자들마저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의의 정의'마저 매우 모호함을 알 수 있다. 공공의 이득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는 경제학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 구체성을 동반한 용어와 정확한 정책 지표를 통한 사회적 담론이 요구돼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해석해 보자. 서구유럽의 경제체제가 이에 가까운데 특히 스웨덴의 사민주의 경제체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핵심은 살트세바덴(Saltsjobaden) 협약식의 노사정 대타협이 요구되는데 과연 정쟁 타협의 결과물인 세율인상과 고용 보장 및 경영권 보장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았다튀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의 내용을 보면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완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해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우리나라 재벌들보다 경제력 집중이 심한 스웨덴식 경제체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식 경제민주화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식으로 분배 정의로 해석할 경우 경제학적인 논의는 어디서 출발해야 할 것인가? 상기한 바와 같이 일단 파레토 최적의 집합인 'core'에서 어떤 점이 분배상 최적점인가를 질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보다 현실에 가깝다. 산업 쪽에서 본다면 수요독점(monopsony)



및 터널링(tunneling;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 재벌개혁과 관련이 있고 법인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계 쪽으로 본다면 소득세를 비롯한 직간접세 조정 및 복지지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중 시급한 문제는 수요독점에 따른 재벌들의 초과이윤 문제인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순환출자 문제나 금산분리는 이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있는 터널링은 여러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데 순환출자나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을 해체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최적인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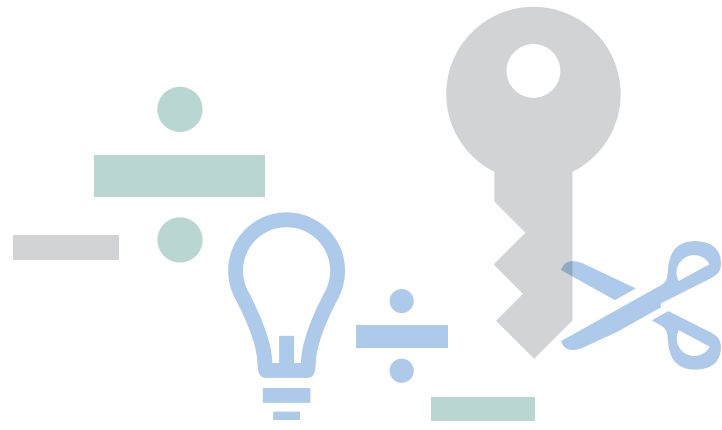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수사 성격이 짙다. 이런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구체성을 동반한 용어와 정확한 정책 지표를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승화시키고 실질적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박정민**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dhahn930@gmail.com

# 창의성으로 다이어트를 ; 빼기와 나누기



## 아깝다 생각 말고 빼자

글을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지워버리기 아까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이기고 지울 때 좋은 글이 나온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군살과 같이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는 전선으로 본체와 연결돼 있다. 여기서 전선을 지워버린 것이 바로 선 없는 키보드, 선 없는 마우스다. 무선 전화기, 무선 이어폰, 무선 헤드폰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물에서 덜 중요한 것, 귀찮은 것, 필요 없는 것 등을 지워내는 것이 뺄셈의 원리다. 무가당 주스, 무가당 껌과 같이 설탕을 빼거나 미니스커트, 반바지, 삼각팬티, 노트북 타이어 등 물건의 일부를 빼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이슨사는 회전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출시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나 제트블루 항공과 같은 노프릴(no frills; frills은 옷의 소매와 가장자리 주름장식으로, 마케팅에선 기본 서비스에서 빼도 지장이 없는 추가 서비스를 말함)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200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운송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항공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저가요금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트블루 항공도 무료 서비스를 없앤 저가요금의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은행업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눠 보자

일반 냉장고를 위와 아래로 나눠 냉장고만 있는 것과 냉동고만 있는 것으로 만들어도 새로운 제품이 된다. 또 운동화 끈을 따로 팔 수도 있다. 아이들은 신발 끈을 잘 묶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 끈이 빨리 해진다는 점과 신발 끈의 색깔과 디자인에 따라 신발 자체가 달라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신발 끈을 색깔별·길이별로 판매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따로 입혀야 하는 인형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텔사는 1959년 루스 핸들러가 고안해낸 바비 인형의 옷 수억개를 팔았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소파를 교체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커버가 탈착되는 소파를 개발하고 커버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

이러한 나누기 발상법은 음식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이 중국음식점에 가면 자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릇을 둘로 나눠 한쪽에는 자장면을, 다른 쪽에는 짬뽕을 주는 것이 짬자면이다. 미국 사람들도 피자를 시킬 때 어떤 토핑의 피자를 먹는지 고민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피자가 나왔다. 피자 한 판을 둘이나 넷으로 나눠 여러 종류의 토핑을 한 판의 피자에 올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스파게티도 두 종류를, 예를 들면 크림 반 토마토 반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다.

마케팅에선 일부러 고객층을 작게 나눠 목표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전략을 사용한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를 나눠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가격차별이론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좋은 방법이다.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번 제거해 보자.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박재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kwrho@mest.go.kr  
경제학 박사, '두뇌 개발', '창의성'에 관심이 많으며, 생각을 꽃피우는 방법을 소개한 책 '생각 3.0'을 펴냈다.

## 국도·철도·하천부지 활용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

국토해양부

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자전거가 생활 밀착형 운송 및 레포츠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요즘은 도심이나 공원, 어디에서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거나 아예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길이 단절돼 있다는 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소유 도로·철도·하천부지를 활용해 단절 없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해설 Plus에서는 정부의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 계획, 현행 도로 구조의 문제점, 자전거길 이용자 사례 및 정책 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새 정책을 말한다

# 2020년까지 자전거길 2,117km 설치

우리나라는 여객 82%, 화물 74%가 도로(자동차)를 통해 수송된다. 좁은 국토와 삼면의 바다를 고려할 때 철도·연안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도로의존적 교통구조로 돼 있다. 에너지 투입량이 철도보다 7배 정도 높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환경보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철도망을 확충하고 연안해운을 활성화해 균형 잡힌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교적 저투자로 단기간에 자동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10%를 상회해 자전거가 통근·통학·쇼핑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전거길, 자전거 주차장과 같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열악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소유 부지 활용해 전국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국토·철도·국가하천을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자전거길 설치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자전거길 2,117km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국가 소유 도로·철도·하천부지를 이용해 자전거길을 설치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전국적

으로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는 중소도시의 취락지 주변 국도의 일정구간을 정비해 생활형 자전거길을 만들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내 자전거길과 연결해 도시권별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광양시 광양읍 등 9개소 44.2km의 자전거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의 중소도시 취락지 국도변에 자전거길 273km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수요와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1,757km를 개통한 바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과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718km의 자전거길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려 한다.

철도폐선부지의 경우 인근에 주거지·학교·공단 등이 위치해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폐선부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전거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춘선 4개구간 48.9km, 전라선 2개구간 2.8km, 중앙선 1개구간 3.1km 등 철도 폐선부지 7개구간에 총 54.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철도폐선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형, 경사도, 경관 등을 고



01



02

01 지난 3월 23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버스를 이용해 삼각지역 부근 도심을 지나고 있다. 자전거 버스는 자전거 출근 노선을 정하고 일부 자전거가 출발한 후 시간대별로 정해진 정류장에서 추가로 합류해 무리를 지어 출근하는 방식이다. 02 경남 창원시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는 학생들

려해 가능한 한 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화성 동탄 등 12개 신도시에 2020년까지 총 1,027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해 자전거가 신도시 내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자전거길 조성과 함께 자전거 대여소, 수리소,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임대자전거를 도입해 자전거로 통근·통학·쇼핑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전거만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동통로 설치, 열차 내 자전거칸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국철도공사, 해당 지자체와 함께 2009~2013년까지 철도역 20개소에 자전거 1만3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전거 수송분담률 5% 달성으로

#### 교통난 완화·에너지 절약 기대

국토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자전거'를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의 하나

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교통 조사사업을 통해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전거 보유율 등 자전거 관련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보행과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길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 후엔 전국 자전거길 연장이 2만4천km에 달하고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가 도시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물론이고, 연간 1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절감과 30만tCO<sub>2</sub>eq(이산화탄소환산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경제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aviation@korea.kr

인터뷰(지자체) ▼

# ‘단절 없는 자전거길’, 지자체 간 협조가 필수

최순구 성남시청 자전거문화팀장



판교신도시 내 자전거길 네트워크가 잘 조성돼 있다고 들었다.

판교신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된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된 도시다. 200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자전거길 조성계획도 함께 세웠으며, 판교 내 학교, 공원 등 주요 시설을 자전거길로 연결해 자전거로 통학·통근·산책 등 일상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자전거길 사업의 목적이었다. 현재 신도시 내 31개 노선, 총 29.2km의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나?

지난 2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27.1%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판교신도시 지역 생활권이 46.5%로 가장 높았다. 구도심 거주자의 자전거 이용이 신도시 거주자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전거 이용 주요 목적지 및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공원 및 천변’, ‘건강을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출퇴근용 등 다른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레저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자전거길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나?

성남에는 지방하천인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이 탄천을 따라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다. 판교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탄천변 자전거길을 이용하면 왕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구도심 내에 자전거길 조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신도시와 달리 구도심의 도로는 지하도가 많으며, 가파른 언덕이나 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상당하다. 자전거길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절 없는 자전거길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 지자체와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탄천변 자전거길이 용인에서 출발해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 및 한강까지 연결돼 있어 탄천변 자전거길을 이용하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단절된 구간이 많다. 앞으로 주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공공임대자전거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자전거를 지하철역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확대하고, 거치대 수를 늘리며 공기주입기도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자전거길을 보면 도로 단절, 보행자 위험 구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자전거길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와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분실된 자전거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타인의 물건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 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보행자가 있을 시 속도를 낮춰주길 바라며, 보행자들도 자전거 주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한다.

기획

# ‘점프’ 없는 자전거 이용 시급해

이강주 자전거길 이용자(경찰청 수사과, 46세)



몇 년 새 자전거 이용자들이 크게 늘었다. 언제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게 됐는지.

2007년부터니까 6년째다. 직장인이다 보니 평상시 별도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 현재 도로 여건이 어떠한가.**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서대문까지 출퇴근한다. 자전거로 2시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집부터 회사까지 자전거로 완주한 적은 몇 번 안 된다. 체력적·시간적으로 힘든 점도 있지만 자전거길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혹시 ‘점프’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자전거길이 중간에 단절돼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도시나 하천 주변에는 자전거길이 잘 조성돼 있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지만 지자체 간 연결도로 지점이나 회사가 밀집돼 있는 도심지역은 자전거길이 단절돼 있거나 아예 길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점프’는 어떻게 하나?**

출퇴근 시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주로 이용한다. ‘점프’를 할 경우 자전거를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승객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능한 한 피크타임을 피해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에 자전거 이용 전용칸을 운영했으면 한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하다.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주차한다. 이런 경우 자전거 분실이 문제다. 거치대에 튼튼한 자물쇠가 있었으면 한다. 자전거가 비에 젖지 않도록 지붕

도 필요하다.

**도심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승용차와 같이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승용차 사이를 달릴 때면 진땀이 난다.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나 교통신호등 대기 시에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설혹 자전거길이 있더라도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길이 좁거나 승용차가 주차돼 있기도 하다. 어떤 지역은 물건이 적체돼 있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단절 없는 자전거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자전거 이용자들도 같은 길만 다니기보다는 다른 길을 달리고 싶어 한다. 전국 네트워크 자전거길이 조성된다면 원하는 지역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전거 특성을 고려해 단거리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자전거길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장거리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로 외에 부대시설도 필요해 보인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휴게소, 숙소, 수리점 등의 시설물 건립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자전거길 구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자전거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충격을 바로 몸으로 전달하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자전거길 구축 시 가능한 한 아스팔트와 같은 포장재료를 사용했으면 한다. 또한 자전거길과 보행자 통행로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충돌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분리해 설치하길 바란다. ▶ 관련기사

●서현원 나라경제 기자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

# 위급상황 대비해 자전거에 비상연락 기록물 부착해야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1만2천여건을 넘어 5년 전에 비해 40%가량 늘었다. 자전거 안전운전을 위한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 사고 시 대처방법 및 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는 자동차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우측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신호도 준수해야 한다.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후크턴'(hook-turn, 2단계 좌회전) 방식으로 해야 한다. 후크턴 방식이란 교차로 바깥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진신호에서 교차로를 건너간 다음, 방향을 바꾼 후 다음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가는 방식이다.

장거리 운전 시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시내 도로, 국도, 지방도를 이용할 때가 있다. 도로에선 우측통행을 하고, 갓길이 있으면 갓길을 이용한다. 갓길이 없을 때는 최대한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한다. 또 내리막길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와야 한다.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를 오래 타든 짧게 타든 헬멧, 장갑, 전조등, 후미등 등은 생사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비이므로 출발 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급 상황을 대비해 자전거, 가방 및 헬멧 등에 비상연락처, 이름, 혈액형 등을 기록한 부착물을 다는 것도 중요하다. 타이어 교체, 변속 세팅 등의 정비 요령도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는 게 좋다.

자전거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현장과 피해부위, 자전거를 자세히 찍어 사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이나 보험 청구의 증거자료로 확보한다.

현재 자전거보험이 몇 가지 있지만 자전거 파손, 도

지난 8월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능내역 광장에서 열린 자전거 119 구급대 발대식에서 119 자전거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고 있다.



난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없어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한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미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과 보장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보험료가 이중지출될 수도 있다. 대신 자전거보험은 방어비용(소송,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다른 보험과 차별된다.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과 규모, 보험료가 각기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보험 가입이 꺼려진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라는 특약을 이용하면 좋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상해, 자동차, 실손의료)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도 생겼다. 남민 기자



김수기  
바이크매거진 기자  
ksk@bikem.co.kr

## 필요한 시설, 이용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국토해양부는 단절 없는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국도와 철도, 하천, 신도시 등에 자전거길 2,117km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 소유인 도로나 철도, 하천부지를 활용해 자전거길을 설치하면 토지구입 비용도 줄이고 자전거길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자전거길을 보면,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건설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길이 끊긴 구간이 많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도나 철도 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지를 자전거도로로 바꾸면 자전거길 네트워크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걱적이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면서 레저수단이다. 교통수단으로는 단거리 교통수단이고 레저수단으로는 국토종주가 가능할 만큼 장거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고유의 특성상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중·단거리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 협조가 문제다. 철도의 폐선구간이나 활용도가 없어진 국도·지방도 구간을 자전거길로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맺어 자전거길을 설치하는데, 해당기관 입장에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춘선의 경우 서울시 구간에

서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대라는 것인데, 자전거 네트워크는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반드시 맞는 논리라고 할 순 없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인 만큼 타당성이 아주 없지도 않다.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는 자전거는 다른 대중교통과의 효율적 연계도 중요하다. 최근 철도역사 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주로 신규로 건설되는 역이 중심이지 수요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건설하진 못하고 있다. 예산상, 법률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천부지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하천부지에 자전거길을 설치하면 이용자는 좋은 풍경을 즐기면서 자동차의 방해 없이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보면 예산 문제로 강을 벗어나는 자전거길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다. 포장도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 이미 설치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친환경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포장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보행공간과도 분리해 충돌 사고도 방지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자전거연구실장  
hcschin@koti.re.kr

# ‘마술’ 같은 ‘미술’로 더 가까워진 에티오피아



아마다 제5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핸드프린팅 수업

아프리카 동남쪽에 위치한 연방국가 에티오피아는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미지의 땅이다.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 빈민, 선교 정도만을 떠올릴 정도로 낯선 곳이지만 알고 보면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를 파병했던 인연 깊은 나라이기도 하다.

나는 코이카를 통해 에티오피아 오로미아(Oromia)주의 나자렛(Nazareth)이란 도시에서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다. 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나눔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잦은 단수와 정전, 처음해보는 자취생활, 낯선 언어 때문에 현지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퍼주기식 원조가 아닌 현지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식개선을 이끄는 단원 활동이기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접할 때면 의욕이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개발도상국에 흩어져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후배, 동료단원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단원들과 팀을 이뤄 나자렛 국립병원의 소아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게 됐다.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재미와 회복의 의지를 심어주려 시작한 활동이었다. 나중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작품 전시회와 공연도 열어줘 한국 봉사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봉사의 역량을 조금 더 넓혀 보기로 했다. 내가 근무

하는 초등학교와 오로미아 교육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심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을 보수하는 일이었다. 우리 학교 건물에는 천장이 없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양철 지붕의 열이 교실 안에 그대로 전달되곤 했다. 게다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시멘트 벽 때문에 한낮에도 교실 안은 어두컴컴했다. 교내 전 학급의 천장을 공사하고 내·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학부모들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 비용을 보태 줬다. 동료의 아이디어로 건물 외벽에 교육용 벽화를 그려 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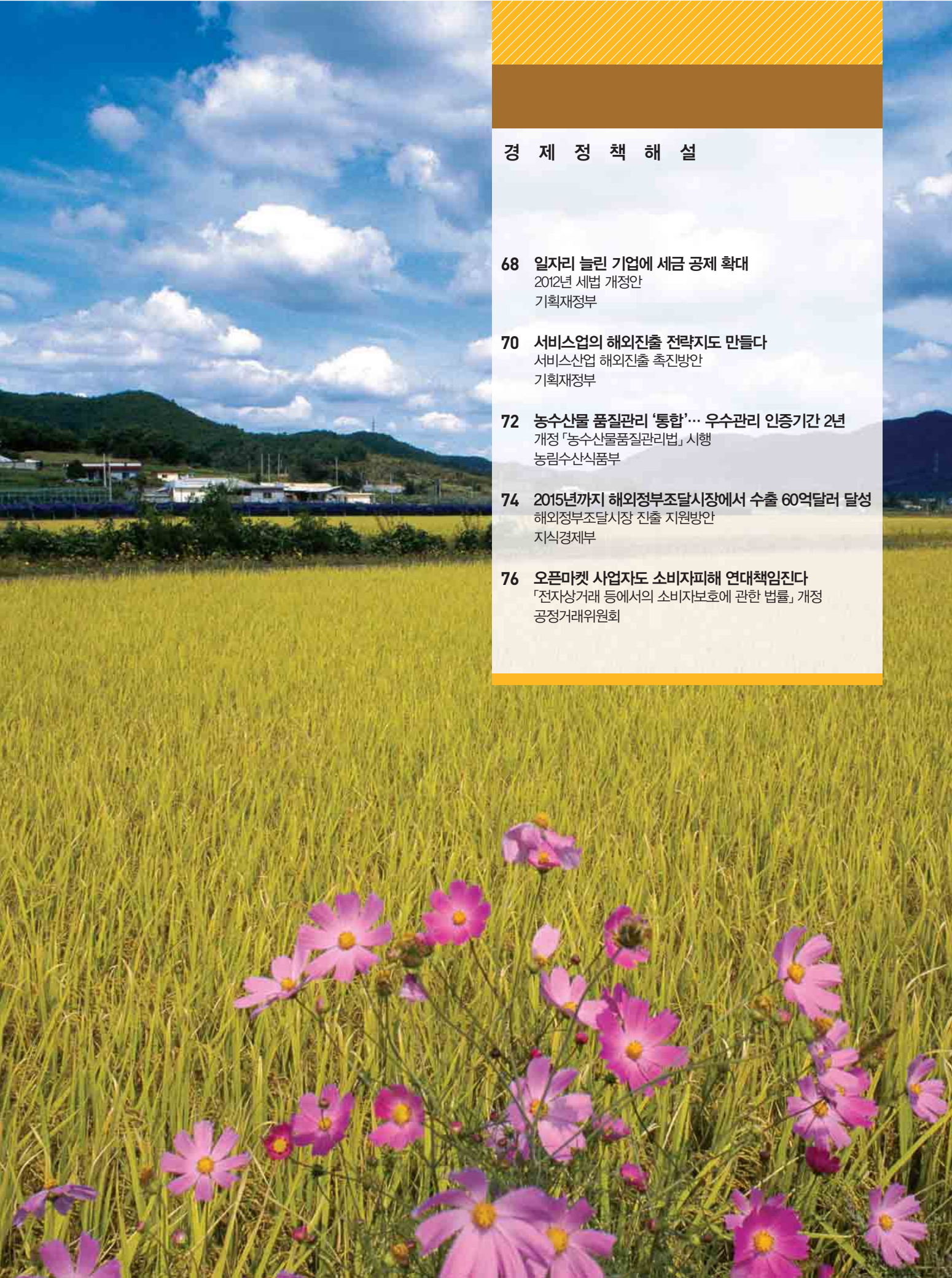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오로미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나자렛시의 초등학교·유치원 교사들을 모집해 'Teachers' Training Course'를 실시했는데 총 150여명의 교사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1기부터 4기까지 각 6개월 과정으로 진행했고 한국의 아동미술 이론과 실습을 강의했다. 이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교사에게는 수료증도 발급해 줬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휴대폰이 없거나 근무지가 서로 달라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실히 임해 줬다.

마지막으로 현지어로 된 미술교과서를 제작했다. 원래는 약 500권 정도를 출판해 각 학교에 정식교과서로 배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쇄 비용이 부족해 PDF 파일을 오로미아 교육청에 기증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런 프로젝트들로 현지에서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한 것이 결국에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이 돼버렸다. 나는 이들에게 잠시 온 손님이었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지속 가능한 열정을 모은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슬땀이 헛되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박유진**  
아트앤드하트 포항 양덕 지구장  
eugeneletter@gmail.com



## 경제정책해설

- 68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금 공제 확대**  
2012년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 70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전략지도 만들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기획재정부
- 72 농수산물 품질관리 '통합'... 우수관리 인증기간 2년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74 2015년까지 해외정부조달시장에서 수출 60억달러 달성**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지식경제부
- 76 오픈마켓 사업자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금 공제 확대

## 2012년 세법 개정안

○ 세계경제는 올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지역 부진의 지속,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 서민생활 안정 위해

#### 소비·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추세의 지속, 물가 상승률 둔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지표인 재정여건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적자·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추진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정여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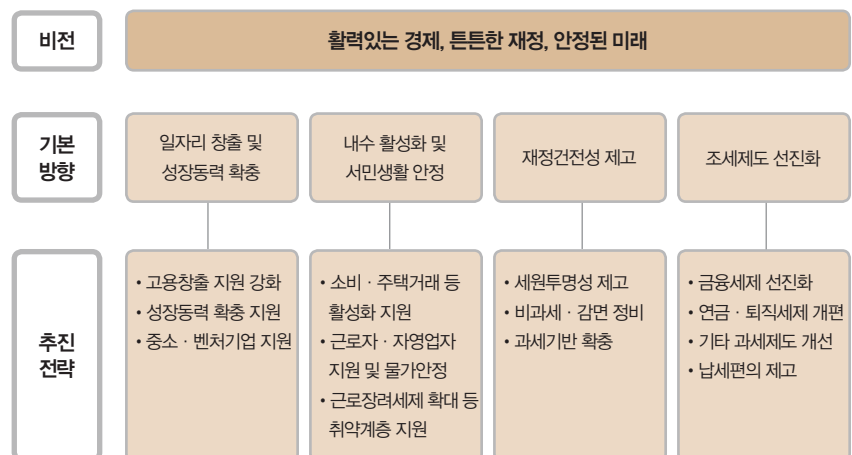
지나해 정부는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법 개정에 담았다. 또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도입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 구현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현안과제로서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며, 금융세제 선진화 및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퇴직소득

<그림> 2012년 세법 개정안 추진방향





01 지난 8월 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02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녹색성장 지원 및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진은 미세조류 배양 및 고부가가치 자원화기술을 개발하는 ㈜NLP의 연구 모습

세제개편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녹색성장 지원 및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기업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주택거래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자영업자의 생활지원 및 물가안정 유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국내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개선 등 세원투명성 제고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상향 등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노력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며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제정 36년 만에 「부가가치세법」 알기 쉽게 개편**

넷째, 미래사회에 대비해 금융세제, 연금·퇴직소득 세제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 등 '선진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올해 세법 개정안은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현안대책과 중장기적 정책들을 조화롭게 반영하려 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T/F를 구성해 '세법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그 첫걸음으로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 제정 이후 36년 만에 전면 개편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법령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다.

정부는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제구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가능케 하는 재정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

● 조규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kcho3@most.go.kr



#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전략지도 만들다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 정부는 지난 7월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의결하고 의료·콘텐츠·e러닝·엔지니어링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의료·콘텐츠·e러닝·엔지니어링을 우선진출 업종으로 선정

WTO 협정(GATS),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생산자원 이동과 투자가 늘어나는 등 서비스무역 분야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서비스수출은 2001년 1조5천억달러에서 2010년 3조7천억달러로 연평균 10.6%씩 증가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출도 같은 기간 292억달러에서 816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2.1% 성장이라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기준 2.21%로 상품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3.06%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그간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 여력

이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우리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서비스수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내수 중심

의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수요를 겨냥한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해외진출 우선업종'과 '우선진출 국가'를 선정하



지난 7월 2일 마카오에서 열린 'K-POP Nation Concert in Macau 2012'에서 소녀시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 이를 뒷받침할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서비스업 해외진출 전략지도 작성 연구'를 진행해 왔고 업종별 추진과제 발굴 등 관계부처 간 추가작업을 거쳐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장중요도·성장잠재력 기준으로 5개 산업을 선정 후 글로벌기업의 한국진출 여부 및 해외진출 준비 정도, 진출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콘텐츠·e러닝·엔지니어링 등 총 4개 업종을 우선진출 업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선정된 우선진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우선진출 국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현지 시장규모 등 정량적 선정기준으로 진출 후보국가군을 선별한 후 진출업종에 대한 후보국가의 정책, 우리 기업의 진출경험 등 정성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종 우선진출 국가를 선정했다. 이같이 우선진출 업종 및 국가선정 작업 후 업종별·국가별 진출전략과 해외진출 촉진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 업체별·품목별로 맞춤형 지원 실시

의료 분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의료서비스를 내세워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현지 환자의 국내 유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정도, 현지 의료 인프라, 1인당 의료비 등을 고려해 경제부국 중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개도국에서는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을 우선진출 국가로 선정했다. 미국 진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주마다 상이한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케팅과 현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 고객층을 교포에서 현지 중산층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선진출 국가별 진출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종합정보지원센터' 구축, 디지털 병원 건립(수주~완공) 가이드라인 개발, 코트라(KOTRA) 내 수출지원 T/F 설치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콘텐츠 분야는 해외수요가 많고 성장률이 높은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방송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진출국가는 시장규모가 크고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국가들 가운데 미국·일본·독일·중국·태국을 중점 공략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은 현지시장 중심, 현지업체와의 협업, 글로벌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스톰리 발굴, '콘텐츠종합정보지원센터' 마련, 국가별 표준저작권계약서 보급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e러닝 분야는 1인당 교육비나 수요, 네트워크 수준 등을 감안해 e러닝 발전국인 미국과 e러닝을 막 도입하기 시작한 중국을 겨냥하기로 했다. e러닝 분야가 해외진출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브랜드 가치 확보, 맞춤형 현지 파트너 선정, 틈새시장 공략, G2G(정부 간)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구축, 지능형 튜터링시스템 개발 등 R&D 추진, 국산제품의 글로벌화·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통해 e러닝 분야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국내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베트남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본 사업 수주 이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해외사업에 필수적인 실적확보를 지원하고 진출유망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기술애로 사항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지원뿐 아니라 전 서비스업이 해외진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분야별·지역별 공

공 해외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성공스토리 창출을 위해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업체별·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해외진출 시 필수적인 해외시장 정보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외현지사업 매뉴얼',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 '분기별 해외 한류동향 보고서' 등을 발간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

●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kang7@most.go.kr



# 농수산물 품질관리 '통합'...

## 우수관리 인증기간 2년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경남 함양군 휴천면 백연리 고정마을 염권철(57) 씨 부부가 노지에서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이곳 포도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색깔이 곱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산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전에 농림부에서 운영하던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전면 통합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

의회로 통합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해 제도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차례 법령 개정 등으로 복잡해진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고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농수산물 허위·과대 광고 벌칙 강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친환경 농산물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와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 2015년까지 해외정부조달시장에서 수출 60억달러 달성

###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 해외조달시장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가 국방·교육·보건·SOC 등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서비스·건설서  
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정부조달시  
장, 국제기구조달시장, 개발원조(ODA)구매시  
장 등으로 구분된다. 해외조달시장은 정부조  
달시장이 약 9조2천억달러(이 중 경쟁 가능  
시장은 약 2조달러), 국제기구조달시장이 약

400억달러, 개발원조구매시장이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 미개척, 그래서 유망 시장인 해외조달시장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외국 공공기관 발주  
건설수주액이 579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상품시장의 경우 미국이 약 10억달러, EU  
가 약 2억달러 정도로 추정(2011년)된다. 국제  
기구조달시장의 경우도 국제개발은행(MDB,  
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발주 건설수주  
액이 8억7,600만달러(2010년)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상품시장 조달액은 약 5천만달러 수  
준이다. 개발원조구매시장은 우리나라 제공  
ODA(2011년 13억2천만달러)는 대부분 우리  
나라가 수주하고 있으나, 타국 ODA시장에서  
의 수주액은 미미하다.

세계 각국의 민간 부문에서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조  
달시장에서도 진출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있다  
면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특히 최  
근 한미 FTA, 한-EU FTA 체결, WTO 정부조  
달협정(GPA) 개정 등으로 해외정부조달시  
장은 개방이 확대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  
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  
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FTA로 확대된 해외정부조달  
시장 진출 증기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중 정부  
조달시장만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아울러 최근 신  
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대형 프로젝  
트 추진 시 기업을 대신해 정부 또는 공공기





지난 5월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등이 주최한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2'가 열렸다. 이 행사엔 39개국 65개 발주처가 참가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건설 인프라, 발전 등 플랜트, 기타 신재생 에너지 등 1,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관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도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거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해외조달시장의 점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2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UN, 국제개발은행(MDB) 등 국제기구조달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해외정부조달시장에서 수출 60억달러(건설서비스 제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시 느끼는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 진출단계 · 유형별로 기업애로 해소에 집중

기업들이 해외정부조달시장을 진입하기 다소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울러 생소한 절차 및 시장정보 부족 등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애로요인이다. 정부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준비 기업들을 위한 입찰정보, 컨설팅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입찰절차 · 참여방법을 우리 제도와 비교해 기업에 매뉴얼로 제공하고, 유망 국가별 유망 조달기관 및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해외조달시장 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각국 정부조달제도, 입찰정보, 시장동향, 성공사례 등을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조달시장은 국제기구조달시장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존재해, 투명성과 개방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자국산 선호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또한 각국 정부의 조달관은 접촉편의, 대금결제,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현지거점이 없는 업체로부터의 조달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정부조달 진출 희망기업들의 현지거점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참가, 민간 파트너링 사업, 조달사절단 파견 확대 등을 통해 간접조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현지 벤더(vendor)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 줄 방침이다. 진출 희망기업과 현지기업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코트라(KOTRA) 내 수출인큐베이터(B), 지사화,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직접조달 진출 희망기업들의 현지거점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정부조달시장은 대금결제방식 등이 B2B 거래와 상이한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수출금융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은 선금이 없고 후불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거나 수출실적이 적은 경우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계약체결 이후 생산 ·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출금

융을 우대하고, 국제기구 · 외국정부 등과의 수출계약 사실에 기초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정부조달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코트라 무역관 내 조달진출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코트라에 기업을 대신해 구매국 정부와 계약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해 우리 기업들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제 침체 등으로 대외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정부조달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미개척 분야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도전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번에 수립된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시장개척 노력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해외정부조달 시장에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

● 신동준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장  
shindj11@empas.com

# 오픈마켓 사업자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진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이래로 급격히 성장해 2011년엔 약 32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수치는 약 36조9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대형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매 유통채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매 유통채널에서 전자상거래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전자상거래, 회원탈퇴·청약취소 온라인으로 손쉽게

그러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지난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하지만 법률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7년부터 2년에 걸친 논의와 검토 끝에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09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2년간의 국회 논의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2012년 2월 17일 공포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법률 운용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제·개정작업을 완료,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일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돼 소비자편의가 강화됐다.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완결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광고, 청약, 확인·증명 등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쇼핑몰이 회원가입, 청약 등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



지난 2월 28일 서울 일민미술관 앞에서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가 위조품과 품질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위조품 200% 보상'과 '빠른 배송', '유효기간 이후 미사용 쿠폰 환불' 등의 제도를 알리고 있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의무화하면서 거래와 관련된 확인·증명도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강화했다.

둘째,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전체 사업자의 55% 정도만 가입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의 제출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률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자결제 시 결제내역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자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결제를 진행하거나 무료이벤트 후 자동으로 유료결제 전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 결제가 이뤄지는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 법률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에는 반드시 재화내용, 금액 등의 결제내역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결제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강화해 소비자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명령에 더해 영업정지·과징금부과도 가능**

셋째,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인 오픈마켓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책임

〈표 1〉 주요 소매 유통채널별 시장 규모

(단위: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자상거래	18,0	22,0	27,4	32,0
대형마트	30,6	30,9	33,7	36,9
백화점	19,8	21,5	24,0	26,5

자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2

〈표 2〉 휴대폰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현황


(단위: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피해접수	13,724	12,553	44,074	36,239

자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이 강화됐다. 기존 제도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어떠한 소비자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픈마켓 시장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42%에 육박하고, 영세한 소규모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약 90%가 호스팅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통해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고 만약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입은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호스팅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가 아닌 관련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업자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공정위의 조치가 소비자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급명령·교환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부가가 위반행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해 제재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은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사업자 간담회, 온라인 홍보 등으로 널리 알리고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힘 쓸 것이다. 

●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redot@ftc.go.kr

한국  
경제

# 수출급감 · 제조업 경기악화, 한국경제 ‘빨간불’

Reuters, "S. Korea July exports, inflation dip" (2012. 8. 1)

Telegraph, "Global manufacturing slows as euro crisis dents demand" (2012. 8. 1)

Wall Street Journal, "Korea holds steady on rates" (2012. 8. 10) 등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한국의 수출이 지난 7월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의 경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외신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3년래 가장 큰 폭의 수출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향후 전망도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8월 1일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한국의 7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유럽의 경기둔화에 직면한 한국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수부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직면한 악재들에 계속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HSBC 한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들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낮은 47.2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지 *Telegraph*는 8월 1일자 기사에서 유로존 부채위기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전반에

걸쳐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MarketWatch*는 아시아 각국의 7월 PMI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안정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경제가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만 아시아시장도 냉각된 경기를 살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가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수요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고용과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MarketWatch*는 전했다.

*Reuters*는 8월 1일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내수가 여전히 깊은 부진에 빠져 있는 만큼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는데, 한국 경제당국이 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8월 9일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WSJ는 10일자 기사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한은이 7월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연내 금리인하를 적어도 한 차례 더 단행할 것이라고 대체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급등한 국제 곡물가격은 금리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할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loomberg*는 한국경제가 더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않을 것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실었다. 신경재



지난 6월 27일 부산항 신 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미국경제, 재정절벽\* 우려로 성장둔화 압박 가중

\* 정부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Wall Street Journal, "The 1.5% presidency" (2012. 7. 30)  
New York Times, "Fed sees slowing economy, but defers new action" (2012. 8. 2)  
Economist, "No miracle cure" (2012. 8. 11) 등

미국의 현재 경기회복세가 과거의 회복기보다 현저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침체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했고 최근 고용 부문에서도 잇따라 부진한 지표가 발표됐다. 이는 경기침체가 이후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활발한 고용이 이어졌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외신들은 최근 부진한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지난 3월 7일 미국 오래군주 포틀랜드의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우려를 나타내면서, 의회가 올해 말 대규모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에 따른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기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onomist*는 8월 11일판 기사에서 1981~1982년 침체기 이후의 회복기에는 미국의 GDP가 3년간 18.5% 늘어났지만 현 회복기에는 6.7%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규모 재정책대와 통화완화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던 1980년대와 달리 현재는 연방·지방정부의 예산이 크게 삭감됐고 기준금리도 0%에 가까워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도 7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단순히 GDP 성장률이 감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평균적 회복기와는 달리 지금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취업 기회를 잃고 있고 빈곤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취약한 경기회복세가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강조했다.

외신들은 미국경제가 내년 1월 재정절벽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데도 의회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경제가 이미 성장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WSJ는 8월 6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미약한 7월 고용지표는 기업들이 세금·규제·대선 관련 혼란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고용과 투자 결정을 보류하면서 기업 활동이 정체돼 있을 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세금인상을 추진하면 고용시장의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WSJ는 8월 10일자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재정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각 경제주체들이 미국경제가 재정절벽에 처하는 상황에 대비하게 됨에 따라 내년뿐만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한편 *New York Times*는 8월 2일자 기사에서 7월 31일~8월 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준이 경기회복 및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다 강력하게 시사했지만, 이미 단기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인 만큼 연준의 통화완화 조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

● 이선하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특허 등 무형자산 거래 시 가치평가는 어떻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별기업 간의 거래조건이 과세당국에 정확하게 신고됐다면 이 조건을 과세당국이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 기업 간의 거래 시에는 과세당국이 유사한 독립기업 간 거래였을 경우를 상정해 세무상 거래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전가격 과세제도’라 한다.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가격 등 거래조건을 임의로 결정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체결하는 조세조약의 모델인 OECD 모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은 “특수관계 기업 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됐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됐을 것이 이 조건 때문에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해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조약상의 규정과 각국 국내 세법령(우리나라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가별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차이가 클 경우 이중과세 위험이 커지므로 OECD 회원국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실무,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실무,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국가 간 상호합의, 각국 법원의 판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OECD, 경제상황 따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해 와

OECD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2010년에도 비교가능성 분석, 이익접근법,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이전가격 측면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2010년 이후엔 무형자산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이전가격 조사면제 기준, 이전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시간적 범위 등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아직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 3개 분야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지난 6월 공개한 바 있으며, 9월까지 수렴되는 민간의견을 참고해 회원국 간의 논의가 2013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10년 개정판 발간을 위한 논의에서도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문제는 중요 이슈였다. 무형자산의 개념, 식별, 가치평가 등에 있어 충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해 납세자들과 각국 정부는 이전가격 목적상 무형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는 이전가격 관련 쟁송과 이중과세 위험 등 무형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무형자산의 확인

개정안은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법률적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 노하우, 상거래상의 비밀, 상표, 상호, 브랜드, 라이선스, 영업권 및 계속기업 가치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영업권 및 계속기업의 가치는 독립기업 간의 자산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금전적으로도 유의미한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회계 또는 기업평가 목적의 잔여분(residual) 측정방식은 이전가격 분석엔 적절하지 않다. 반면, 그룹시너지, 특정 시장의 구매력·노동비용·경쟁수준 등 시장특성, 기업이 보유한 전문숙련인력 집단 등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이전가격 결정 시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

#### ② 무형자산 관련 수익의 귀속

무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이 다국적기업의 어떤 구성원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면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계약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및 보호 등에 대한 분석결과, 법률적 등록이나 계약관계와 거래당사자들의 행위(기능수행, 위험부담, 비용부담 등)가 일관되지 않는 경우엔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험 또는 비용을 부담한 거래당사자들에게 무형자산 관련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단, 이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에 제3자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등록·계약관계와 행위 간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무형자산이 이용되거나 이전되는 거래

무형자산 이전가격 분석 시 세 번째 단계는 무형자산이 관련된 구체적 거래를 식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는 무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이전 없이, 재화나 용역의 제조 또는 판매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무형자산이 이용되는 거래로서, 거래의 본질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이용된 무형자산을 식별해 비교가능성 분석, 이전가격 결정방법 선택, 분석대상 거래 당사자 결정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형자산 이전거래는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거래(Sales)와 지리·시간·사용범위 등에 있어 제한된 권리가 이전되는 거래(Licence)로 구분되며, 이

전가격 분석 시엔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및 제한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형자산 거래는 복수의 무형자산이 결합돼 이전되거나 다른 사업상의 거래와 결합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이전될 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결합거래를 계약요소별로 분리해 이전가격을 분석하거나 또는 결합된 전체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을 분석할 수도 있다.

#### ④ 무형자산 관련 정상가격의 결정

##### - 비교가능성 분석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이전이 개입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가능성을 분석할 때는 무형자산 자체의 비교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독점성(Exclusivity), 법률적 보호의 범위·기간, 지역적 범위,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개발단계, 무형자산의 개선 권한, 미래 기대이익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무형자산을 통한 실제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 제품 진부화, 무형자산 권리 침해 등 미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함에 있어 존재하는 위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형자산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무형자산의 작은 차이가 경제적 결과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접근법 등 비교가능한 무형자산이나 거래에 덜 의존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무형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 선택 및 적용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나 이익분할법이 유용하며,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법이나 재무적 가치평가기법과 같이 비교가능 제3자 거래에 덜 의존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러나 무형자산 개발 소요비용에 기초한 가치평가기법은 역사적 원가와 무형자산 가치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전가격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경험에 기초한 어림짐작으로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또는 이익의 분할을 결정(rules of thumb)하는 방식 역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익분할법을 적용할 때는 무형자산 외에도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다른 무형자산, 라이선스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받은 기업의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수행기능에 따른 통상적 이익을 제외한 잔여이익 전체가 당연히 대여자 또는 양도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적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는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추정 수입산정 → 추정 비용을 공제해 추정 영업이익

의 계산 → 일상적 수행기능에서 발생하는 이익, 무형자산 이외의 자산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이익 등을 추정해 공제 →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성 등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해 현재가치로 할인'의 순으로 이뤄진다.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내용연수, 잔여가치 등에 대한 가정의 작은 변화가 가치평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가정의 근거와 합리성, 민감도 분석결과 등을 이전가격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시점에서 무형자산 가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 거래 후 상황에 따라 가격 조정 계약,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상황 변화 발생 시 계약조건 재협상 등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 시 계약방식을 참고해 정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이전가격 결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기존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이전가격 결정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의 구분, 정상 가격 원칙의 적용, 상표나 상호를 소유하지 않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관련 이슈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개정안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무형자산 관련 수익의 귀속 결정, 무형자산이 관련되는 거래의 유형, 무형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결정 등 무형자산 이전가격 관련 이슈를 단계적으로 서술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완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을 마케팅 무형자산과 사업 무형자산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무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여부가 불투명한 사항들에 대해 보다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룹시너지, 시장의 특성, 확보된 전문 숙련인력 집단(Workforce in place) 등은 무형자산 이라기보다는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소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그 의미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제적 소유권 개념을 언급하지 않고 법률적·계약적 소유권을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귀속 결정을 위한 우선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추정 현금흐름

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상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 관련 비교가능성 분석 요소로서 무형자산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 할인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 관련 거래와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CF(Discounted Cash Flow)와 같은 재무상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술하고 있다.

### 국내 여건에 따른 쟁점별 입장 정리해야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초안 내용엔 아직까지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여럿 포함돼 있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개념을 반영할지 여부, 법률적 소유권자 외의 무형자산 관련 소득의 귀속을 인정할지 여부, 전문 숙련인력이나 시장특성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무형자산 관련 소득이 귀속되기 위해서 중요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것이 요건이 되는지 등은 회원국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견의 배경에는 무형자산을 라이선스하는 국가와 라이선스받는 국가, 자본의 수출국과 수입국, R&D 서비스의 제공국과 수요국 등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차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도 주요 쟁점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큰 변화인 현금흐름 할인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도 언급하고 있듯이, 여러 변수에 대한 불확실한 가정을 기초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국내 제도상 도입 여부 및 도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평가상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관련기사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재봉**  
주OECD 대표부 참사관  
jb0202@daum.net



WTO

# 특허전쟁, ‘게임의 룰’부터 챙겨야 이긴다

WIPO 지식재산권 협상 동향

최근 삼성과 애플이 ‘세기의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쪽이 패할 경우 해당 스마트폰 판매금지에도 천문학적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양 기업 모두 명운을 걸다시피 하며 세계 9개국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 애플 외에도 지금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까지 ‘특허대전’을 치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는 데 지난해 한 해만 약 34조원을 썼다.

전 세계 특허전쟁의 룰을 만들고 심판 역할을 하는 곳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다. WIPO는 당초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886년)의 사무국이 모태가 돼 196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special agency)이다. 현재 185개국이 가입돼 있고,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24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시대로 변모하고 IPR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금 WIPO에서는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기서 WIPO 차원의 논의 동향 모두를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고 이번 기회엔 전반적인 큰 그림만 소개하기로 한다.

## 16년 만에 시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타결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이 타

결됐다. 1997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16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 조약에는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권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고정된 실연(DVD, 영상물 등)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며, 실연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최소 50년으로 확대하고(기존 로마협약은 20년),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베이징 조약의 가장 큰 의의는 그간 가수나 연주자 등 청각 실연에 비해 권리 보호가 미진했던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도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적 보호체계가 마련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K-pop,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우나 연기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베이징 조약이 타결되면서 WIPO의 저작권 관련 이슈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에

01 지난 6월 20~26일 중국 베이징에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시청각 보호조약 외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협상이 16년 만에 타결되면서 '베이징 조약'이 탄생했다. 02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전경



관한 국제규범 제정과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조약 마련, 이 두 가지로 모아진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 이슈는 국제규범의 유연성 조항을 활용해 지재권 적용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다. 여기에는 시각 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에 관한 제한과 예외, 도서관 및 기록보존(archive)에 관한 제한과 예외, 교육 및 연구기관에 관한 제한과 예외 등 크게 세 갈래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s) 보호 이슈는 기술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방송신호 송수신이 보편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집권 침해의 빈도 및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대두됐다. 2007년 WIPO 총회에서 방송신호(signal)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약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7월 개최된 제24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단일 협상문안을 채택한 바 있다.

### '디자인법 조약' 타결 목전에 뒤

WIPO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에서는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관련 현안과 규범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SCT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자인법 조약(DLT: Design Law Treaty) 제정 협상이다. DLT 논의는 디자인을 국제적으로 등록해 보호받는 데 있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를 통일화(harmonization)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2006년 시작됐다. 디자인 경쟁력이 강한 유럽 국가들이 구속력 있

는 조약 형태의 국제규범인 DLT를 적극 선호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제24차 SCT에서 협정 초안이 마련돼 출원서(application), 대리인(representation), 보호기간, 공자유예기간(grace period)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1년 10월, 제26차 SCT에서 DLT 최종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재권 제도 통일화 추진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DLT 이행에 따른 각국 정부 및 출원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 하자는 제안을 들고 나와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DLT 외교회의 개최가 결정될 경우 이 회의의 서울 유치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DLT가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DLT는 '서울 조약(Seoul Treaty)'으로 명명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역사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SCT에서는 DLT 협상 외에도 상표 분야의 현안으로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충돌, 사이버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 물건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인터넷상 상표 사용 문제 등이 논의 중이다.

### 한 치 양보 없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특허' 기싸움

WIPO에서 국제 특허제도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장인 특허법 상설위원회(SCP)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가장 많은 파란을 겪는 곳이다. SCP는 1998년 창설됐으나 국제 특허제도의 실제적 내용을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간 극심한 대립을 거듭해 한동안 SCP 자체도 문을 닫다시피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1월 개최된 제15차 SCP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마침내 SCP의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작업계획에 합의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젠다를 절충한 것으로 ①특허권의 제한과 예외(개도국 관심사항) ②특허의 품질(선진국 관심사항) ③특허와 공중보전(개도국) ④고객과 특허대리인 간 접촉의 비밀유지(선진국) ⑤기술이전(개도국) 등을 담고 있다.

특허 수요자인 개도국들은 기존 국제조약에 규정돼 있는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각국 공중보전 정책 차원에서 의약품의 접근권 확대를 위해 특허권 유연성 확대를 도모하고, 특허제도가 기술이전에 장애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특허 권리자이자 제공자인 선진국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 진영이 절충점을 찾아 향후 SCP가 순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치킨게임을 벌이다 좌초할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8차 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뜨거운 감자’, 유전자원·전통지식 등 보호 협상

WIPO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현안 중 모든 회원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 지재권 제도에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뜨거운 감자’가 바로 ‘유전자원(GR;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K;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TCEs; folklore o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 협상이다(이하 관련 위원회 약칭인 IGC로 지칭).

IGC 이슈는 주로 개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 민간 의료요법 등 전통지식, 전통음악과 미술 등 민간전승물을 선진국 기업들이 무단으로 지재권화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을 막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말부터 논의돼 2000년 9월 WIPO 총회에서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가 창설됐고 이듬해인 2001년 4월 제1차 IGC가 개최됐다.

이후 구속력 있는 조약형태로 갈 것인지 단순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문안 협상을 추진 하되 문안의 법적 성격은 일단 덮어두고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를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협상타결 실패로 2011년 WIPO 총회는 IGC 협상 기한을 다시 2013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2001년 IGC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는 여전하고, 해결방 안도 요원한 상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을 이용한 특허출원 시 이들의 출처를 특허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mandatory disclosure)하고, 해당 공동체의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과 이익공유(benefit sharing) 합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다.

WIPO에서 주요 회의가 열릴 때면 MS, GE, 화이자 제약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나타나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마후에서 주요국 대표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한다. 자국 정부와는 긴밀히 대화하며 협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답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줄지에 분쟁에 휘말려 남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싸울 게 아니라 ‘게임의 룰’을 만드는 단계부터 관여해 유리한 룰을 만드는 ‘룰메이커(rule-maker)가 돼야 한다. 특허전쟁 시대, 기왕 벌어진 싸움은 최선을 다해 싸워 이겨야겠지만 진정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지금 WIPO에선 지식재산 패권이 걸린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학계 모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용선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재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용선**  
주재네바대표부 WIPO 총괄 참사관  
ijprkhan@gmail.com



# FTA 관세 혜택 극대화하려면 BOI 검토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제도)

사람들은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나 저관세로 수출입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FTA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원산지 기준에 적합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므로 우리 기업체로서는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EU의 원산지 사전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양 지역에서는 FTA 관세 혜택 물품의 수출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기업체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장기적으로는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EU의 원산지 사전확인제도(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의 신청절차,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원산지 기준 적합물품만 특혜관세 적용받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FTA가 체결되면 체결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무관세나 저관세로 수출입이 돼

FT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원산지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수출해야만 양 지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사후에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과 이를 통한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기업체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EU에서는 회원국들이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BOI 제도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EU의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관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의 12조와 공통 시행규정인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의 5조 내지 1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먼저 첫 번째 법령에선 BO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

정한다. 세관당국은 서면으로 신청된 BOI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BOI를 발급해야 한다. 또 발급된 BOI의 원산지 기준 결정과 관련된 내용과 BOI가 제공된 날 이후에 세관절차를 완료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을 구속한다. BOI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신청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BOI가 발급된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BOI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특정 규정이 채택되거나 EU의 협정에서 결정돼 BOI의 내용과 동 규정 및 협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 EU 차원에서 원산지 기준의 해석을 위해 채택한 주해서 및 의견과 부합하지 않거나 EU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국제적 차원에서 WTO의 원산지 협정 및 동 협정의 해석을 위해 채택한 주해서 및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BOI 소지자에게 사전에 동 BOI의 내용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이 통보된 경우이다.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은 ①의 경우 동 규정 및 협정이 시행되는 날이고 ②의 경우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게재돼 공표된 시점 또는 EU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날이 된다.

한편 동 법령은 위의 사례에서 BOI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의 경우 동 규정 및 협정에서 해당 BOI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②와 ③의 경우에는 BOI 소지자가 해당 BOI에 근거해 그 효력이 정지되기 전에 제품의 구매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간은 해당 BOI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입·수출·사전확정 증명서가 제출된 물품에 대해 세관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공동농업정책에서 규정된 조치들을 원활히 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유효기간의 유예에 관한 내용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 BOI 소지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BOI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를 결정하는 경우 둘째,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출환급 및 기타 수입·수출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셋째, BOI에 근거해 발급된 수입·수출·사전확정 증명서를 제출해 해당 물품의 세관신고 승인을 위한 세관절차가 진행될 때 사용하는 경우다.

두 번째 법령에는 BOI의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먼저 BOI에 대한 신청은 서면

지난 5월 22일 서울 노현동 건설회관에서 관세청은 '국제 원산지 검증과 FTA 활용의 조화'라는 주제로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라이헤나우섬' 산지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된 토마토가 판매되고 있다. 이 섬에서 재배된 야채는 EU의 원산지 보호를 받게 된다.

으로 해야 하며, 신청기관은 BOI가 사용될 회원국의 세관당국이나 또는 신청자가 소재한 회원국의 세관당국이다. 또한 신청물품은 제조과정에서 같은 원산지 조합으로 이뤄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BOI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BOI 소지자의 성명 및 주소 ②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BOI 소지자와 다른 경우) ③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의 22조 내지 27조 중 적용할 법적 근거, 즉 특혜/비특혜 관세 여부 ④제품의 상세한 명세와 품목분류 ⑤제품의 구성방법, 원산지 결정 시 사용될 검사방법, 공장도 가격 ⑥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과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제조공정기준, 기타 보충적 기준 등) ⑦제품과 원재료와의 구성관계와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샘플, 사진, 도면, 카탈로그 등 ⑧신청한 회원국 세관당국에서 요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 당해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에 동의 ⑨일반대중 또는 행정기관에 대해 비밀로 취급될 특정한 내용 ⑩신청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④ 또는 ⑥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EU 내에서 과거에 BOI를 신청했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 ⑪제공한 정보에 대해 EU 집행위의 DB에 저장돼 공개되는 것을 수락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

게 신청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BOI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이다. 다만 신청자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세관당국이 BOI를 발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급기한은 세관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발급된 BOI는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당해 BOI를 적용할 책임이 있는 세관당국은 그 소지자에게 세관절차 종료 시에 당해 BOI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세관당국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우리 기업, 수출입 전에 해당국 절차 파악해야

지금까지 EU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BOI 제도를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원국 세관당국에 직접 문의해서 세부 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U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수출입 통관규정이 완비돼 있으나, 실제 수출입 통관의 집행과정에서 각 회원국별로 미세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EU를 구성하고 있는 27개 회원국별로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세관행정에서의 완전한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체의 경우 수출입을 하기 전에 해당국의 거래업체, 물류업체 등을 통해 사전에 통관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FTA는 지역 간 무역협정으로 해당 지역의 원산지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 기업체로서는 수출물품에 대해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원산지 검증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FTA의 적극 활용을 통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태곤**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tksung@customs.go.kr



# 침체에 빠진 호주 경제, 생산성 증대가 화두

호주의 총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3%였으나 2010년에는 9% 대로 떨어졌다. 제조기업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비중도 유사하게 떨어졌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호주 산업의 침체는 인건비, 물가 등 원가 상승과 호주화 강세에 따른 수입파워 확대 등이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생산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면적의 약 35배, 남한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 그러나 인구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00만명의 나라 호주. 호주는 한국의 14위 수출 대상국이며 5위의 수입 대상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이며 9위 수입 대상국이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에서 최근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 증대가 이슈다.

호주의 경제동향을 설명할 때, 현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투 스피드(Two-Speed) 경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호주에서 광물자원산업은 활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물자원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관광 및 도·소매업 등 여타 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광물자원산업도 여의치 않은 듯하다.

이러한 호주 경제를 감안해서인지 최근 호주에서는 생산성(Productivity)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석탄, 철광석 등 자원 분야가 호주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자원이

격의 하락,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외 산업은 인건비, 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생산성 증대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호주 2위 커널정유소 폐업... 콰타스항공 구조조정

최근 호주 제2의 정유소가 폐업을 결정했다. 다국적기업인 칼텍스는 57년이나 운영해온 커널정유소를 2014년부터 정유 수입터미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63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호주 국영 항공사인 콰타스항공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근로자노조(TWU)와의 노사분쟁이 지속돼 왔는데, 호주공정근로청(Fair Work Australia)은 콰타스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콰타스항공은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에 따라 약 2,8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요타, GM홀덴, 포드 등 3대 제조사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공장가동을 전제로 한 보조금을 수시

로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포드사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도 1년간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48%에 이르는데 특히 서비스, 파이낸스, 제조업, 건설 분야의 부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총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는 약 13%였으나 2010년에는 9%대로 하락했으며, 제조기업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은 2001회계연도 약 13%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7%대까지 떨어졌고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자원분야를 제외한 호주 산업의 침체는 인건비, 물가 등 원가 상승 및 호주화 강세에 따른 수입과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생산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호주인적자원관리협회(Australian Human Resource Institute)의 용역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생산성 성장(Productivity Growth)은 조사국 51개국 중 50위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성장에서 호주는 100점 중 10.3점으로 50위를 기록했는데 호주보다 뒤에 처진 국가는 0점을 기록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뿐이었다. 이번 조사에 랭크된 51개국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전 지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포함됐으며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경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생산성 성장률은 하위에 머문 것이다.

#### 자원가격 하락, 관광객 감소 속 생산성 향상 요구 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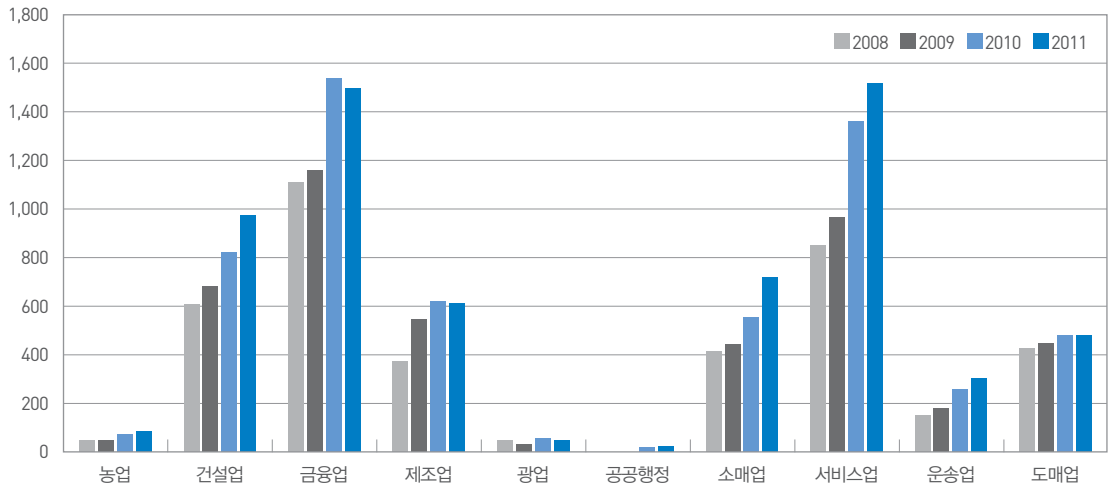
호주는 자원이 풍부하다. 세계 최대 석탄, 철광석 수출국이고 우라늄, 아연, 니켈 최대 보유국이기도 하며 천연가스의 경우 2020년까지 세계 제1위의 LNG 수출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호주의 2011년 수출총액 2,719억미달

호주의 콰타스항공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큰 폭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연도 · 산업별 파산 현황

(단위: 개수)



자료: Dun & Bradstreet

리(한화 약 313조원)에서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은 약 47.5%에 달하며 그 비중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자원의 3분의 1을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또한 호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약 587만5천명이 관광객으로 호주를 방문했으며 이 중 한국 방문객은 3.4%로 8위에 해당된다. 2011년 유학 신입생은 55만7천명에 이르며 이 중 한국 유학생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어왔기에 호주는 그동안 생산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철광석의 가격은 떨어지고 호주화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어들고 오히려 호주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유학생도 줄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호주 주요 인사들도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호주산업협회(AIG)의 인스 윌록스 회장은 호주의 제조업 분야가 경제 세계화,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출현, 달러 강세, 기술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각 산업이 이러한 압력에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게 정부정책이 도움을 줘야 할 것이며 경영과 생산성의 혁신·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호주 산업의 침체는 한국 기업에는 호재일 수도 있다. 커널정유소가 문을 닫게 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석유, 경유의 양이 늘어날 것이며 포드자동차가 공장을 폐쇄한다면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이 폐쇄돼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감소한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이기에 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1788년 필립 선장은 죄수 736명을 포함해 약 1,030명을 이끌고 시드니에 상륙했다. 음식과 의복을 흠치는 등의 작은 죄로 다시는 살아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라 호주(Never, never Land)에 내동댕이쳐진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열망했다. 태양과 맥주 그리고 럭비를 사랑하는 호주인,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보다는 안정적인 편안한 삶을 지향해 온 이들이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박정호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규철**  
KOTRA 호주 시드니 무역관 차장  
kchoi@kotra.or.kr

2012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를 진단해본다.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고충, 다문화 사회의 국민의식, 이주민 정책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니이누마 치카 코코로베이비시터 이사

## 같지만 다른 일본 스타일, 한국 스타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을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나눌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것, 물질적 부가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러한 고정관념과 무지, 이해 부족은 편견을 낳고 결국 깊고 지독한 소외를 만들어 낸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금방 어우러질 수 있지만 서로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생각보다 넓고 높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2008년 한국에서 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니이누마 치카(Chika Niinuma 30세, 일본 출신). 그녀 역시 한국에 들어와 제일 먼저 맞닥뜨린 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었다.



대학 졸업 후 아시아나 항공에서 국제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노선을 맡았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일본어 담당이었거든요(웃음). 그러다 결혼하고 한국에 오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죠, 문화는 생소하죠. 문화적 충돌이 생길 때마다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한국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말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기에도 바빴을 그녀가 어떻게 창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베이비시터. 아직 아이가 없는 새댁이 선택하기엔 그리 만만한 직종이 아니다.**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건 아니었어요. 어학당을 다니며 어렵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평범한 전업 주부였는데, 아주 우연히 시작된 거예요. 친한 일본인 친구의 아이를 돌봐준 것이 계기가 됐어요. 친구 역시 한국말을 잘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는 없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된 생활을 한 거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아시잖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거기에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의 아이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그런 친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었어요.

시작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미용실에 가야 할 때 잠시, 문화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때 잠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입소문을 탄 것이다. 의뢰가 많이 들어와 혼자서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지자 일본인들이 즐겨찾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필요한 사람을 서로 소개해 주면서 겨우 감당할 수 있었다. 창업을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아이를 맡기는 사람도, 맡은 사람도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선 법적인 회사가 필요했어요. 물론 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그때 창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남편의 지인이 일본에서 베이비시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받아 일본에 가서 한 달 정도 공부하고, 일도 하면서 그쪽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잠깐, 꼭 일본에 가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려는 찰나, 그녀의 대답이 이어졌다.**

일본에서도 맞벌이 부부, 특히 커리어우먼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지만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한국처럼 가족관계가 가깝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채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준다고 할까요? 베이비시터, 보육시설 등이 한국보다 더 잘 구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교육 마인드, 서비스 등을 한국 스타일에 맞게 접목해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업이었어요. 그때 서울 글로벌센터 외국인창업대학을 알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자기 일처럼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감사드려요.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진행되는 강의가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는 않았지만 창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권하는 그녀.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서 들으니 강의는 영어가 필수다.**

처음엔 힘들었죠. 영어로 강의를 진행되는데 사실 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웃음). 그런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노무, 세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가르쳐줬어요. 대부분 창업 아이템은 자기 나라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 한국에 팔거나 자국의 특별한 음식을 들여와 파는 방식을 선택한 거 같아요.

2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로운 타국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건 이런 친구들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

유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한다고 하니 일석이조다. 이번에는 한국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다.

단적인 예로 아기가 열이 나면 한국에서는 몸을 시원하게 해 주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요. 시어머니, 남편, 의사가 모두 그건 틀렸다고 말해요.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점차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죠.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는 데다 언어 차이로 인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 안에서만 머물다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베이비시터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고충들을 들어주고 문화 차이를 설명해주죠.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카운슬링을 통해 조언도 하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관계죠.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편해야 아이도 편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베이비시터에 뛰어든 이유가 느껴진다. 일종의 동병상련이 아닐까? 그런데 한국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이 그렇게 다른지 사실 잘 몰랐다. 가장 비슷한 언어와 외모를 가진 외국인을 꼽으려면 솔직히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처음엔 저도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문화도 그렇고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입관이 문제였어요. '다름'에서 출발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건너뛰 거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는 거죠. 처음부터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본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배려했을 텐데. 다름의 작은 차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생각하는 한국 스타일의 매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대답한다.**

'빨리빨리'요. 저는 한국의 매력, 한국 스타일은 '빨리빨리'가 주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아요.

정체대 있지 않고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겁다는 그녀. 이제 일본 스타일이 아닌 한국 스타일이 분명해 보인다. ■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다문화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5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식량난은 탈북현상을 가속화시키며 매우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아 강을 건넌 탈북자들은 숨어 살기 위해 중국인과 강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법적 신분 때문에 늘 단속과 강제송환의 위험에 놓여 기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등 현지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점차 현지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제한적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이와 함께 탈북 관련 중개인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내입국자의 규모도 크게 증가해 2011년엔 2,706명이 입국했다. 2012년 7월 현재 총입국자는 2만4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자립·자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남한에서 일상화된 외래어 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북한 출신이라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도 적응에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1년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남한에서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1,878명)의 배우자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35.6%), 북한(34.0%), 남한(27.2%) 순으로 나타난다. 2008년 이후 입국자의 경우는 중국 출신 배우자와의 결혼비율이 47.0%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취학 전 자녀의 출생국가도 북한보다 중국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중국 출생



지난 6월 3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열린 창경궁 1박 2일 궁중생활 문화체험에 거례일 새터민학교 초·중등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자가 북한 출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북한 내 가족을 데려오려는 노력과 더불어 탈북 이후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이의 중국인 아버지를 국제결혼 형식으로 초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는 국내입국 이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등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다문화지원체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모습은 초기와 다르게 다문화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변화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은 지역단위 다문화서비스체계를 통해 상당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과 결혼해 살고 있는 한족 출신 중국인들에 대한 언어 및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여성과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우리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받는 정착지원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통일을 논의할 때,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한 민족의 번영을 넘어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slee@kinu.or.kr

9월이 되면 텃밭농부도 한숨을 돌린다. 이미 심고 뿌려놓은 작물들을 잘 가꾸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혹 미처 배추를 심지 못했더라도 9월 초면 아직 늦지 않았다. 김장 전에 먹을 김치거리인 알타리무, 순무 따위를 심어도 좋고, 갓이나 잎채소를 한 차례 더 심어 늦게까지 길러먹을 수도 있다.

### 숙아주고 옷거름주고 복주고

씨로 뿌린 무나 갓, 잎채소 등은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 한두 번 숙아 자라기 좋게 간격을 만들어줘야 한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옮겨 심은 배추모종은 본밭에서 90일 가까이 자라게 한다. 밑거름을 충분히 줬다면 한 달쯤 지나 옷거름으로 술술 양분을 채워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밑거름으로 썼던 퇴비를 한 주먹씩 포기 둘레로 두세 번 넣어주거나(일주일 간격으로) 받아온 오줌액비를 물에 희석해서(5배로) 뿌려주면 좋다. 또 포기 둘레를 북돋아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한다.

9월이 되면 무더위에 잠시 쉬었던 벌레들도 선선해진 날씨에 새끼를 번식시키고 텃밭의 작물들을 왕성하게 섭식하며 세를 늘린다. 연하고 달달한 배추 잎을 뽕뽕 뚫어놓고 점점이 파란 똥을 흘려놓는 배추흰나비에벌레나 배추 잎을 짓물러놓는 달팽이썩은 예사로 봐줄 수도 있지만, 배추통 전체를 시커멓게 점령해버리는 진딧물이라면 기겁할 노릇이다. 이들 말고도 벼룩잎벌레, 무잎벌레들도 배추와 작물들을 노린다. 먹을거리 내 손으로 기르는 텃밭농부들에게 애시당초 벌레를 농약으로 잡는 건 말도 안 되고, 쫓거나 잡는 수밖에 없다.

벌레를 잡는 방법으로 권할 만한 몇 가지. 우선 향이 강한 쪽파나 갓, 부추 따위를 배추와 무 사이사이에 심어 벌레들이 피해가도록 한다. 또 풀을 어느 정도 놔둬 벌레들이 작물 쪽으로만 모이지 않도록 한다. 배추벌레, 벼룩잎벌레, 달팽이 같은 벌레들은 나무젓가락이나 핀셋으로 잡아준다. 그리고 고약한 냄새를 내는 목초액(나무를 태운 연기를 액화시킨 물. 목초액은 식초와 마찬가지로 살균, 살충 효과를 냄)을 뿌려 벌레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한다. 목초액은 물에 희석해(100배) 2~3일에 한 번씩 자주 뿌려준다. 진딧물이 모여든 작물에는 끈끈한 마요네즈 희석액(200배)을 자주 뿌려 포박한다.

### 물 주는 대신 비 맞게 하기

텃밭농부들은 배추통을 크게 키우고픈 마음에 쫓겨 하루가 멀다 하고 물을 준다. 물론 작물한테도 물은 필수겠지만 과하게 물을 먹여 키우면 배추가 연한 대신 단맛이 덜하고 쉽게 물러질 수 있다. 수돗물보다는 빗물을 맞고 크는 편이 작물에게도 좋다. 빗물에는 질소질이나 유기물이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가물 때만 물을 몇 차례 주되, 기갈이 들지 않도록 흠뻑 준다. ☞



배추벌레



무잎벌레



벼룩잎벌레



진딧물

배추와 채소에 잘 모여드는 벌레들  
사진: 박원만, 「텃밭백과」



**김자숙**  
jisskim@naver.com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펴내는 「텃밭신문」 편집장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오십견도 고치고 복잡한 머릿속도 많이 맑아졌다고 한다.

●● **그림의 겉과 속** 우리는 그림을 겉모습으로 파악한다. 색깔이 어둡고 형태가 어둡고 입방아를 찧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다. 화가는 은연중 혹은 의도적으로 캔버스라는 사각의 텃밭에 자신의 속내를 심어놓는다. 그 속내를 파헤치는 즐거운 놀이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의 '도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



기모노 차림의 한 젊은 여인이 상념에 잠긴 채 서 있다. 청색의 화문석 위에 발을 디딘 그의 손에는 꽃이 그려진 부채가 들려 있다. 또 그의 뒤에는 화조도 병풍이 나른하게 팔을 벌린 채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다. 병풍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사슴처럼 목을 길게 뻗은 청화백자가 돛자리와 한 세트인 양 묵묵히 서 있다.

그림 속 풍경으로 보아 무대는 아마도 일본인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아하게 치장한 여인은 일본 여인이라기보다 서양 여인에 가깝다. 또 그림의 제목은 왜 하필 '도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일까. 작가는 아마도 일본을 염두에 둔 듯한데 굳이 '도자기 나라'라고 얼버무린 이유는 뭘까. 그러나 주제를 너무 심각하게 따져 들어가 봐야 헛수고다. 그림을 그린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James Abbott McNeil Whistler, 1834~1903년)는 그림에서 논리성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19세기 후반 일본복장을 한 서양 여인을 그린 사람은 휘슬러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모델에게 기모노를 입히고 손에 부채를 들게 한 다음 병풍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 네덜란드 화가 게오르게 헨드릭 브레이트너 그리고 미국 작가인 윌리엄 메릿 체이스 등이 이런 유형의 작품을 앞다퉈 그렸다. 특히 모네가 부인 카미유를 모델로 그린 '일본 여인'(La Japonaise, 1876년)은 19세기 후반 서구의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휘슬러만큼 일본취미를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녹여 넣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휘슬러는 미국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그림공부를 하다 1855년 파리로 유학간 후 글레르에게 프랑스 고전주의 미술을 배웠다. 그 후 마네, 모네 등 인상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개성적 화풍을 구축해 나갔다. 1859



01 제임스 맥닐 휘슬러, 도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 1863~1864년, 캔버스에 유채, 200×116cm, 워싱턴DC 프리어미술관  
 02 클로드 모네, 라 자포네즈, 1876년, 캔버스에 유채, 231.5×142cm, 보스턴미술관  
 03 제임스 맥닐 휘슬러, 백색의 심포니, No. 2 작은 하얀 소녀, 1864년, 캔버스에 유채, 76.5×51.1cm, 런던 테이트브리튼미술관



년 런던에 건너간 휘슬러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입장을 취하며 회화를 주제의식에서 독립시키고 조형요소 간의 조화를 중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예술은 예술 자체의 목적이 있을 뿐 작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건축가인 에드워드 윌리엄 고드윈을 통해 일본미술을 접하면서 심화되는데 고드윈은 호쿠사이의 작품을 비롯한 에도시대 컬러판화를 열렬히 찬미했다. 휘슬러의 작품에 드러나는 평면성과 색채 사이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장은 일본 판화의 영향이다. 이런 휘슬러의 성향을 고려할 때 '도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 휘슬러에게 중요한 것은 주제가 아니라 형태와 형태, 색채와 색채 사이의 하모니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휘슬러가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던 크리스틴 스파르탈리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다. 1863년 말부터 1864년 초에

걸쳐 그려진 이 그림은 스파르탈리가 자기 아버지에게 구매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거절했다. 작가의 사인이 지나치게 튀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인의 위치도 아래쪽이 아니라 관람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왼쪽 상단이어서 불쾌감을 자아냈던 것이다. 이 작품은 1885년 파리의 살롱전에 전시됐고 몇 년 뒤 리버풀의 선박왕 프레데릭 레이랜드에게 팔렸다.

이 작품에서 휘슬러는 사각형과 원형의 조화를 꾀했다. 돛자리와 병풍이 딱딱한 직선적 형태라면 공주와 부채, 청화백자 화병은 부드러운 원형의 미감을 보여준다. 특히 서 있는 공주의 신체는 에스(S)라인의 유연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휘슬러가 좀 더 무게를 둔 것은 색채의 조화였다. 그가 사용한 색채는 서너 가지에 불과하다. 공주의 머리와 착용하고 있는 기모노의 흑색이 중심을 잡아주고 상단의 짙은 회색 톤과 하단의 돛자리의 청색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이 무거운 색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공주가 걸친 가운데의 베이지색과 뒤편 병풍의 흰색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휘슬러가 이러한 색채 사이의 조화를 음악적 하모니와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가 자주 작품에 '하모니'(harmonies)나 '녹턴'(nocturnes)이니 하는 제목을 붙인 데는 그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백색의 심포니, No. 2: 작은 하얀 소녀'(1864년)가 그 대표적 예다.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다른 휘슬러만의 독자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그림을 사들인 레이랜드는 이 작품을 청화백자가 즐비한 런던 타택의 응접실에 걸었다. 그는 내친김에 휘슬러에게 방의 리노베이션을 맡겼는데 휘슬러가 맘대로 공작새 금장식(그래서 '공작새의 방'이라 불림)을 덧붙이는 바람에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1892년 주인이 죽은 뒤 크리스티 경매에 부처진 이 그림은 '공작새의 방'과 함께 미국의 기관차 사업가인 찰스 랑 프리어에게 넘어갔다. 프리어는 세상을 뜨기 전 이 작품들을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일괄 기증했다. 청년시절 미국을 떠난 후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휘슬러는 그렇게 몸 대신 작품으로 고국의 품에 안겼다. 그림 속의 공주는 곧 서양 문화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동양 문화를 동경하던 미국인 휘슬러의 착잡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글**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sukbumj@naver.com  
 프랑스 파리대학 미술사학 박사.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위기 극복에 대한 재미 경제석학의 유고(遺稿)

고 광승영 교수는 2011년 4월 25일 미국 메릴랜드 포토맥(Potomac)의 자택에서 74세로 별세했다. 필자를 포함해 그를 아는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를 애도했다. 그는 1937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3년부터 워싱턴 소재 하워드대에서 화폐경제와 국제금융을 가르쳤다.

곽 교수는 버클리대를 졸업한 뒤 미국 재무성에서 일한 것이 그 후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됐다고 했다. 필자는 지난 20년 이상 미국 학회에서, 국내 학회에서 그리고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SEA(남부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여러 차례 논문 발표자로 곽 교수를 만나 논문 내용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관해 많은 것을 토론한 바 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공해 자신의 생활에 매우 행복해 했다. 그는 활동 후반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그와 가족의 성공적 삶에 대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한다는 표현을 자주했다. 필자가 그분을 미국서 처음 만나 "어디 사세요?"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 부뚜막(포토맥)에서 살지. 허허!"라고 유머 있게 답하던 분이셨다. 나무와 숲이 우거진, 미국 부자들이 모여 사는 포토맥에 그는 큰 저택을 가진 분이였다.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아들과 장녀는 의사고 차녀는 변호사다. 그리고 부인은 버클리대 수학 박사로서 오랫동안 곽 교수와 같이 하워드대에 동료 교수로 재임해왔다. 곽 교수는 생전에도 모교에 장학기금을 만들어 경제학부 후배 학생들을 도왔는데 그가 별세한 후 그의 부인이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광승영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곽 교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그의 모교와 모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곽 교수는 생전에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많이 발

표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논문은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한국의 의식행동 구조변화의 필요'다. 이 논문은 그가 별세하기 전 한국제도·경제학회가 발간하는 『제도과 경제』 학술지에 제출한 것으로 동 학술지 제5권 제2호(2011년 8월 출간)에 게재됐다. 이 논문에서 곽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인에게 특히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에게 의식과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들과 관련해 정책책임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강 모 부총리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강 모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외환보유고가 많아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경제의 기반이 강하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한국은 양대 위기를 맞았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진정시켰다"고 당시 책임 장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위기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구조적 결함은 고치지 않고 위기를 단시간 내 막대한 금융지원, 신용카드 발부, 가계부채 증대를 통해 모면했으며, 그 결과 신용 버블, 부동산 버블이 기존에 있던 구조적 문제와 결부돼 오히려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곽 교수는 한국사회는 능력 중심이 아니고 학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열광'한다면서 이런 풍토를 없애기 위해선 대학졸업 타이틀 자체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관행이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남겨두고 한국의 경제위기가 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도자 모두는 곽 교수의 유언을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DI School, Knowledge Hub for Development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봄학기 학생모집 안내

### 모집 분야

- 석사과정 :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 주간 및 주말 · 야간과정  
개발정책학석사 (Master of Development Policy) : 주간 및 주말 · 야간과정
- 박사과정 : 정책학 / 개발정책학 (Ph.D.)

###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 학사 및 석사(박사지원자)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영어수강이 가능한 자
- 1차 : 서류심사                      • 2차 : 영어면접

### 전형절차 및 일정

- 원서접수 : 2012년 8월 8일 ~ 10월 26일    • 합격자발표 : 2012년 12월 초

### 장학금 안내

- KDI School Scholarship of Academic Excellence : 입학전형 성적우수자 대상
- Dean's Merit Scholarship : 언론 · NGO 등 대상
- National Service Fellowship :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장학기회 제공

### 입학설명회

- 일시 2012년 9월 15일(토) 10:30 ~ 12:00
- 장소 KDI국제정책대학원 7층 링컨홀
- 문의 02-3299-1263/1281  
[admissions@kdischool.ac.kr](mailto:admissions@kdischool.ac.kr)

#### 해외 제휴기관





# 지구를 위해 70억이 머리를 맞대다

누군가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행방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북극곰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 주려 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마실 물과 공기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2012년 9월,  
 지구를 위해 전세계 70억이 머리를 맞댁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 180개국이 제주에 모여 자연의 회복력을 이야기합니다

**기간: 2012. 9.6 ~ 9.15 장소: 제주컨벤션센터**

■ 개막식 9.6 ■ 세계보전포럼 9.7~11 ■ 세계리더스대화 9.7~11  
 ■ 회원총회 9.8~15 ■ 생태관광 9.13 ■ 폐막식 9.15

[www.2012wcc.or.kr](http://www.2012wcc.or.kr)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nature+

